

인천 청렴 이음

Vol.4

공직윤리 매뉴얼

20
21

인천 청렴 이음

Vol.4

공직윤리 매뉴얼

20
21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중심의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질, 부정청탁, 금품수수, 직위의 사적 이용,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 자발적인 친절을 실천하는 등 『청렴이 기본인 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 행정의 답습, 부조리, 불공정 등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환경과 날로 높아지는 시민 여러분의 바램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 수행, 전문성 강화,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 공직사회의 더 큰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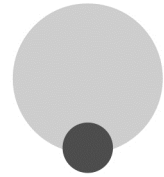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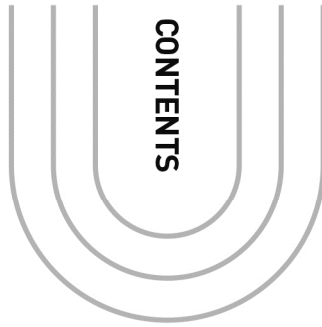
『2021 인천청렴이음』은 인천독립 40주년(민선7기 3주년)을 맞이해서 청렴행정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잠재적 위협요소와 변화에의 촉구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마련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등을 정리한 메뉴얼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의 준수·의무사항을 알리고 위반신고 등의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인천시의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 등을 안내·공유함으로써 인천시 산하 기관과 관내 전 유관기관까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청렴행정을 제도화하여 전반적인 인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두 편의 자료를 행정 현장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렴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더욱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7.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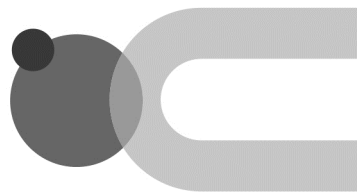


2021 공직윤리 매뉴얼

PART 1	재산등록 및 심사	1
PART 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선물신고	75
PART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105
PART 4	공직자윤리위원회	143
부 록 1	문고 답하기	151
부 록 2	관련 법령	177

PART 1 재산등록 및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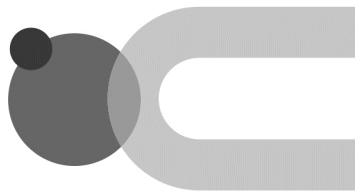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3
Ⅰ. 재산등록	5
1. 목적	5
2. 등록대상	5
3. 재산등록 기관	8
4.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9
5. 재산신고 유예·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12
6. 재산등록(신고) 요령	14
7. 재산등록 현황 보고	28
8. 고지거부제도	28
9.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31
Ⅱ. 재산공개	34
1. 공개대상자	34
2. 공개시기 및 내용	35
3. 공개주체	36
4. 재산등록(신고)에 따른 공개	36
5.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목록 작성 방법	38
Ⅲ.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40
1. 제도개요	40
2. 허가사유	40
3. 허가권자	41
4. 허가신청 및 처리기한	41
5. 위반시 제재	41



IV 위반시 제재	43
1. 재산등록 거부죄	43
2.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43
3. 성실등록의무 위반	43
4. 주식거래내역 신고 등 의무 위반	44
5.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위반	44
6.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45
7. 비밀엄수 의무 위반	45
8.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45
9.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46
10.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46
11. 출석거부의 죄	47
12.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47
13.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47
 제2장 재산심사	 49
I. 재산심사 개요	51
1. 심사의 내용	52
2. 심사기한	52
3. 재산심사 필요조치 사항	53
4. 심사결과의 처리	56
5. 심사관할	57
 II.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60
1. 재산심사 절차	60
2. 단계별 세부사항	61
3.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65

PART 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탕 및 선물신푁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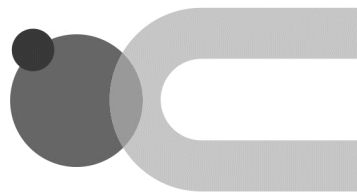
제1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탕	77
Ⅰ. 개요	79
1. 목적	79
2. 대상자 및 내용	79
3. 대상주식	80
4. 신푁고기준일	81
Ⅱ. 주식매각·백지신탕 후 신푁고 및 공개	82
1.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탕 사실의 신푁고	82
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탕 사실의 공개	82
Ⅲ. 백지신탕계약의 체결 및 해지	83
1. 백지신탕계약의 체결	83
2. 신탕재산의 처분 및 운영	85
3. 백지신탕계약의 해지	86
Ⅳ.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87
1.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87
2. 주식백지신탕위원회의 결정사항의 통지	88
3. 결정·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89
Ⅴ. 직무 회피	91
1. 개요	91
2. 회피 대상 직무	91
3. 직무회피 방법	92
4. 직무회피의 예외 및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의 신푁고	92



VI. 의무위반 시 제재	93
1. 주식백지신탁 신고 및 직무관여 위반 시 제재	93
2.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94
3.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94
제2장 선물신고	95
I. 선물신고 개요	97
1. 목적	97
2. 선물신고제도 내용	98
3. 신고의무자	98
4. 대상선물	98
II.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99
III. 선물의 처분	102
IV. 선물신고제도 운영강화	103

PART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1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07
Ⅰ. 개요	109
1. 목적	109
2. 취업의 범위 및 취업심사대상자	109
3. 취업심사대상기관	111
4.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113
5.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115
6. 취업제한의 예외	117
Ⅱ.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119
1.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승인의 비교	119
2.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절차	120
3. 취업제한여부(취업승인)의 검토사항 및 제출서류	121
4. 우선취업제도	122
Ⅲ 취업여부 확인(임의취업 일제조사)	124
Ⅳ.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126
Ⅴ.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128
1.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및 목적	128
2.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및 취업현황 조사	128
3. 공시하는 항목	128
4. 퇴직공직자의 취업사실 신고	129
5. 취업사실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129



제2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131
I. 업무취급제한	133
1. 목적	133
2. 본인업무 취급금지	133
3.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2) 업무취급 금지	134
4. 업무취급승인제도	136
5. 위반시 제재	138
II.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139
1.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139
2.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신고	139
3.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141
4. 위반시 제재	141

PART 4 공직자윤리위원회

I.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145
II. 위원회 구성	146
III. 기능 및 권한	147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	147
2. 재산공개 및 기타	148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등	148
4. 취업제한 심사 등 결과의 공개	148
5. 취업이력 공시	149
6.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149
7.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49
IV. 직권 재심사	150
V. 회의·의결	150

부록 1 묻고답하기

부록 2 관련법령

1.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179
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267
3.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75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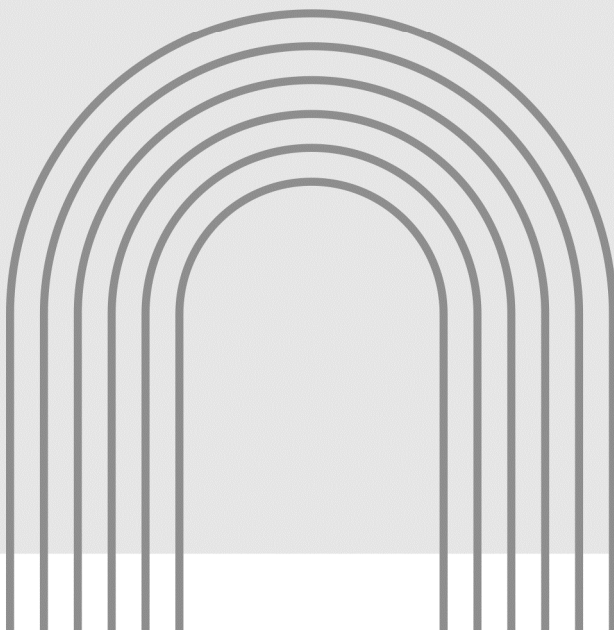
1

재산등록 및 심사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I 재산등록

Part
1

1 목적

-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

2 등록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법 제3조 및 영 제3조)

- 정무직 공무원(시장, 군수·구청장, 지방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분야* 7급이상 공무원 등

* 조세, 감사, 회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등

- ① 시장, 군수·구청장,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②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포함), 4급 이상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연구관·지도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 ③ ②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 ④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이사·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이상의 상근임원
- 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특정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
 - ※ 감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등록기관장이 지정)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특정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 ▶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 등록기관의 장이 특정분야 등록대상부서 지정

■ 등록의무자 신분변동사항 통보

-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승진·전보·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 사항을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등록대상 재산

- 등록대상(본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의 재산

*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대상이 아님

● 등록(신고)대상 재산의 종류

구 분	등록재산의 종류	가액 산정방법
부 동 산 (토지·건물)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div> <input type="checkbox"/> 토지 :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div> <div> <input type="checkbox"/> 주택 :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div> <div> <input type="checkbox"/>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대지)와 공시가격(건물)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 </div> <div> <input type="checkbox"/> 최초신고 :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div> <div> <input type="checkbox"/> 변동신고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①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되, ②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소유권 변동 없는 경우) 이전 신고시 가액을 ①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신고, ②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신고 </div>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는 권리 등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div>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기재 </div>
동 산	<div>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정차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채권·채무 </div>	<div> <input type="checkbox"/> 해당 금액 - 수익증권 저축은 평가액 - 적금, 보험금은 불입액(이자포함) ※ 정차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 항목으로 등록 </div>
	<div>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div>	<div> <input type="checkbox"/>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 액면가 </div> <div>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div> <div> <input type="checkbox"/> 비상장주식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주식 : ‘거래량 가중 평균가’ - 기타 비상장주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div>
	주식매수선택권	<div> <input type="checkbox"/> 현재시가 또는 액면가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기재 </div>
	<div>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제품포함) </div>	<div>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 종류·함량과 중량 기재 </div>

구 분	등록재산의 종류	가액 산정방법
동 산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 종류·크기·색상·작가 및 제작연대 등 명세 기재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취득가액 -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연간 소득금액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기 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출연재산

3 > 재산등록 기관

등록대상자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광역시 및 시·군·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기관

※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및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

※ 공직선거후보자→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4 >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종류	변동 사유	등 록 대 상	등록 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등록 내용
최초 신고	신규	-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법 제5조제1항)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등록 기준일 현재의 재산
	승진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법 제10조제2항) * 예외)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공개자 최초 등록 제외			
변동 신고	정기	- 등록의무자 전원(법 제6조제1항) * 예외) ① 유예 허가 받은 경우 ☞ 유예사유 해소 시 신고 ② 10~12월 중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최초신고 ③ 10~12월 중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 최초신고 ④ 10~12월 중 재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재등록신고 ⑤ 1~2월 중 퇴직한 경우 ☞ 퇴직신고 ⑥ 1~2월 중 의무면제된 경우 ☞ 의무면제신고	다음 해 2월말 까지	1.31일 까지 *재심사 : 2월말 까지	매년1.1 (또는 재산 등록 후) ~12.31 까지 재산변동 사항
	의무 면제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 등이 된 경우포함) 전보 등으로 등록의무를 면제 받았을 때(법 제11조제1항) * 예외) 의무면제 후면제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 다시 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최종재산 신고이후 변동사항
	유예 복귀	- 외국기관으로 파견, 휴직 등으로 변동신고유예 후 복귀자 (법 제6조의3)			
	재 등록	-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의무면제 후 3년 이내(퇴직한 경우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법 제5조제1항단서)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퇴직	- 퇴직한 경우(법 제6조제2항) - 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법 제6조제4항) * 예외) ①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②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신고면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 최초 재산등록(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 (대상) ① 신규임용·승진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②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 (내용) 등록의무자가 된(등록기준일)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
- (기간)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 대상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재공개)

■ 변동신고(법 제6조, 제11조)

● 정기 재산변동신고

- (대상) 등록의무자
- (내용)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신고기준일 : 12. 31)을 등록기관에 신고

※ 다만, 최초 재산등록 후 또는 재등록 신고 후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 (기간) 다음 해 2월말까지
- (예외)
 - ① 등록기관의 장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변동사항 신고 유예를 허가를 받은 경우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법 제6조의3제3항)
 - ② 구금, 실종 등의 사유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신고면제 받은 경우 (제6조의3제2항)
 - ③ 10~12월 중에 최초, 재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포함) - 최초, 재등록신고만 하고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2월 31까지의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법 제6조제3항)
 - ④ 등록의무자가 1~2월 중에 퇴직한 경우 -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 가능(법 제6조제3항)
 - ⑤ 등록의무자가 1~2월 중에 의무면제자가 된 경우 - 의무면제자 변동사항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가능(법 제11조제2항)

●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 (대상)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거나 전직된 경우
 ②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된 경우
 예) 감사원 5급 공무원(등록의무자) → 일반부처 5급 공무원(의무면제자)
 대학의 총·학장(등록의무자) → 평교수(의무면제자)
 등록부서 5~7급 공무원(등록의무자) → 일반부서(의무면제자)
- (내용)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거나 전직된 날을 기준으로 최종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 (기간) 전보 또는 전직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예외) 의무면제자가 된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법 제5조제1항 단서)

- (대상) ① 전보·강임·강등 등으로 의무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②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내용)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
- (기간)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퇴직자 재산변동신고(법 제6조제2항·제4항)

- (대상) ①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②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 (내용)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 부터 퇴직한 날 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 (기간) 퇴직일 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날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예외) ① 등록의무자가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 신분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 정기변동신고로 같음(법 제6조제2항 단서)
 ②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퇴직자변동신고 면제처리

5 재산신고 유예·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 재산신고의 유예 및 면제 제도

● 유예·면제 사유 및 처리절차 등

구분	신 고 유 예	신고유예 및 면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1항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						
사유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 국내 교육기관에서 중·장기과정 교육 중인 경우 유예대상이 아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 위에 상당한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산신고 유형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퇴직신고						
허가 기간	3년의 범위 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다만,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한 후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유예 신청	사유 해소 시까지						
신청 방법	○ 유예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와 인사발령 공문을 등록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 신청시기 :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발령 후 유예 사유 개시 전까지 ※ 예 : 휴직은 휴직일 이전, 해외파견은 파견기간 개시 전 ○ 등록기관장은 인사발령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허가 여부 및 기간을 판단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PET시스템에 입력 - 통보내용 : 허가기간, 유예되는 재산신고 유형 및 유예연도(횟수) ○ 해외파견으로 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휴직을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사유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당초 유예 허가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유예를 받은 기간(연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 신고하고 휴직에 의한 유예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	○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유예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결 요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통보 ⇒ 변동사항 신고 유예 또는 면제 처리 ⇒ 명단 및 사유 관리 * 참고 : 신고유예와 신고면제 구분						
		<table><tr><th>신고 유예</th><th>신고 면제</th></tr><tr><td>-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금의 상태이거나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td><td>- 형법 제41조에 따른 금고, 징역, 사형의 형 확정시점에 구금상태인 경우</td></tr><tr><td>-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 이전인 실종자</td><td>-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 선고된 자</td></tr></table>	신고 유예	신고 면제	-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금의 상태이거나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 형법 제41조에 따른 금고, 징역, 사형의 형 확정시점에 구금상태인 경우	-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 이전인 실종자	-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 선고된 자
신고 유예	신고 면제							
-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금의 상태이거나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 형법 제41조에 따른 금고, 징역, 사형의 형 확정시점에 구금상태인 경우							
-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 이전인 실종자	-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 선고된 자							
		* 현재 구금 중이거나 실종선고 이전 실종자의 경우는 우선 신고유예처리를 하고, 이후 ①형 확정 시점에 구금상태이거나 ②법원의 실종선고 시 재산등록 변동사항의 신고면제 처리						

■ 유예기간 종료 후 재산신고 방법

- 유예 허가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유예를 받은 기간(연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 신고
(법 제6조의3제3항)
- 법 제6조의3제1항(외국 파견근무 등)에 해당하는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 허가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유예를 받은 기간(연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 신고 후 다시 유예신청
(영 제5조의3제4항)
-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경우 유예허가 종료시점(휴직·해외근무 종료일 등)이 11~12월인 경우에는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기간인 2월말까지 유예기간(연도)동안의 재산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신고
- 국외훈련자 등 해외파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당초 유예기간 허가 종료일 전에 본인의 유예연장신청에 의한 유예허가가 가능하며 당해 유예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 국외훈련자는 파견기간 연장신청 시, 재산변동신고 유예신청을 동시에 할 것
- 해외 파견으로 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사유의 변동에 해당되므로 당초 유예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유예를 받은 기간(연도) 중의 재산변동사항을 일괄신고 후 휴직에 의한 유예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법 제7조, 영 제7조 및 제27조)

- 등록의무자가 법정 재산등록기간 중에 재산등록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공무 해외출장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장에게 기간연장을 신청
-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장에게 제출
- 등록기관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병가, 해외출장, 구속, 고지거부 심사기간 연장 시나 불허결정시 등
- 등록기관장은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

- 연장기간은 신청기간과 사유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재산공개대상자는 20일, 그 밖의 등록의무자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 중인 자는 해당기간 동안)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는 10일) 이내 고지거부 신청을 할 수 있음

6 > 재산등록(신고) 요령

■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하여 신고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PETI, www.peti.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SMS휴대전화 인증 로그인(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 확인필요)하여 On-Line으로 재산등록

※ 시스템 사용 문의 : 공직윤리시스템 콜센터(1522-4273)

■ 재산등록(신고) 시 유의사항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기준일을 확인하여 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신상명세서 및 친족사항을 작성하고 등록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

< 등록(신고) 기준일과 등록일(신고일) 구분 >

- ▶ 등록(신고)기준일 : 재산등록의무 발생 시점(예, 신규채용일, 승진일, 전보일, 퇴직일, 정기변동신고기준일(12.31.) 등)
- ▶ 등록일(신고일) : 재산등록신고서 제출일

-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 등에 대한 거주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친목회비, 문중재산, 상속재산, 무허가주택 등), 외국에 있는 재산 및 사실상 타인 소유라도 등록대상자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신고대상임(누락주의)
-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결과를 확인하여 고지거부 불허가자의 소유재산을 신고(누락 주의)

※ 고지거부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이라도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소유 재산을 신고

- 불필요한 소명 방지를 위해 등록된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형성과정(변동사유)’란에 상세하게 기재

■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방법

(1) 신상명세서

- 등록기준일 현재 등록의무자의 성명(한자), 직급, 직위, 상제소속, 자택 및 거주 형태, 직장주소, 연락처를 작성

(2) 친족사항

-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을 작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 및 고지거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
 - 사별하거나 이혼한 배우자, 사망한 직계존비속 및 혼인한 딸은 작성할 필요가 없음 (결혼한 딸이 이혼한 경우 등록대상에 해당)
 - ※ 혼인한 딸은 등록제외 대상임(법 제4조제1항제3호)
 -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사유에 체크
 - 자녀의 경우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손자, 손녀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
-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비속의 경우 친족 상세내용의 등록상태 ‘고지거부’란에 체크(✓) 표시
 -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일지라도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소유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거주형태를 기재(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 거주 등)

(3) 총괄표

- 재산항목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작성

① 부동산(토지·건물)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임차권) 등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등록(신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등록(신고)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영 제4조의2)

- ▶ (토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액
- ▶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액
 - 최근에 분양받아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가 가액 산정방법 적용
- ▶ (상가·빌딩·오피스텔·무허가건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대지가액과 국가(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 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
- ▶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
- ▶ (지상권·전세권) 계약금액(전세보증금 등)

- 동일지역(동·리가 같은 경우)에 지목이 같은 토지라 할지라도 지번별로 분리 하여 작성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필수로 기재

㉠ 소유권

- 부동산의 가액과 소유(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종류 및 용도 등 기타 권리명세를 신고
- 가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최초신고 : 평가액(공시가격, 공시지가 등)과 실거래가액(취득가격, 보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
 - 변동신고
 - (신규취득) 반드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되,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공시가격, 공시지가 등)으로 신고
 - (기존신고) 평가액(공시가격, 공시지가 등)으로 신고했던 부동산은 최근 평가액을 반영 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평가액과 실거래가액 중 높은 금액 신고
- 사실상 타인 소유의 재산이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으면 등록 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별로 그 지분을 신고하여야 함(㎡ 중 ㎡)
- 재산상속이 확실하나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건물의 대지는 건물란에 대지 ㎡ 건물 ㎡로 기재하여야 하며, 대지를 토지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나대지일 경우에만 토지란에 기재)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않음

▶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등록 방법

- (매도) ①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 타인 소유이나, 해당 부동산을 등록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②중도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등록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매입) ①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등록하여도 무방)
 ②중도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등록대상이며, '가액'란과 '실거래가격'란에 등록기준일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을, '비고(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 ※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도 매입한 경우와 같이 등록

㉠ 전세권(임차권)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토지 등은 임차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공무원·군인 임대아파트 등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관사도 해당 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 분양권

- 일반 분양아파트는 등록기준일 당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신고
- 재건축 분양아파트는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이주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 항목에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관련용어

(단위 : 천원)

권리가액	부담금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340,000	40,000	380,000	480,000

- ① 권리가액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 개발이익(비례율) (=보상가액, 지분금액, 자산가치)
- ② 부담금 : 착공 시 건설사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③ 조합원 분양가 : 재건축 아파트 원소유자가 분양받을 경우 부담하는 금액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추가 보상금 발생 /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부담금 발생)
- ④ 이주비용 : 완공 때까지 조합원의 생활유지 등을 위해 빌려주는 자금

㉔ 기타

- 주택연금과 관련한 담보 주택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계속해서 신고하되, 등록 기준일 시점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은 ‘채무’ 항목에 별도 신고
- 신축 중인 건물은 ‘사실상 소유권’으로 신고하되, 가액은 등록기준일 시점까지 소요된 건축비로 신고

〈 부동산 관련 주요용어 〉

- ▶ **가액**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자동차·건설기계·선박·어업권·광업권, 회원권 등), 전문가에 의한 평가액(보석류·골동품 등) 등 이른바 공식적인 가격을 의미함
- ▶ **실거래가격** : 쌍방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 거래에 수반되는 금액을 말함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의미함
- ▶ **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가 있음
 - 개별공시지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적정가격(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는 단독주택 가격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가격
- ▶ **시가표준액** : 건물, 차량, 선박,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등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가격(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 ※ 재산등록신고서상 상가, 빌딩, 오피스텔 가액 산정시 활용
- ▶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 재산의 형태별로 정해놓은 기준가(재산의 형태에 따라 공시지가, 주택가격, 시가표준액 등을 말하며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
- ▶ **공정가액** :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에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 되는 교환가격

〈 자주 실수하는 사례 〉

- ▶ 본인 및 친족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전세(임차)보증금을 누락하거나 채권항목에 잘못 신고
 - ☞ 전세(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해야 함
- ▶ 본인 및 친족소유로 신고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신고 누락
 - ☞ 소유건물 임대로 인한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채무항목”에 신고해야 함

②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의 명세 기재

- ㉠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
 - 가액은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
- ㉡ 자동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
 - ※ 배기량이 없는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의 경우 배기량에 0cc 기재
 - 자동차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자동차보험증서 상 차량 기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과세표준), 전문가의 평가액, 실거래가격 순으로 기재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잔여 채무는 채무란에 신고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소유권으로 신고하지 않음)

- ㉠ 운용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법인 등에 자동차 반납(≒렌터카)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 장기렌터카는 보증금을 채권란에 신고하되, 렌터비·선납금은 신고하지 않음
- ㉡ 금융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할부구매)
 - 리스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하되, 채권의 '비고'란에 리스 관련 사실관계 기재
 - ※ 잔여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처리

- ㉢ 건설기계 : 기종명, 제작회사, 제작연도, 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
- ㉣ 선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 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
- ㉤ 항공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

③ 현금(수표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법 제4조제2항제3호가목)

- 자기앞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여 현금항목에 등록하여야 하며, 현금과 자기앞 수표를 합하여 1천만원이 넘으면 등록하여야 함
 - ※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당좌수표 등 일반 수표는 채권·채무란에 기재
- 현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사유를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④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소유자별 예금·보험·수익증권 등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법 제4조제2항제3호나목)

※ 계좌별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함

-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100% 보장성 보험 제외), 양도성 예금증서(CD), 수익증권(펀드 등) 및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 증거금 포함)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신고
- 개인별, 계좌별로 예금의 종류를 반드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친목회비, 동창회비, 개인사업자금 등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은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좌별로 구분하여 기재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이 '+'이면 예금항목에, '-'이면 채무항목에 등록
 - 외화예금은 등록기준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현지 화폐단위(\$, ¥ 등)로 기재
- 적금, 보험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까지의 불입액(이자 포함)을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만기 계약금액을 기재
 - 순수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소멸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임
 - 보험특성상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중도인출금을 제외하고 신고

- 봉급에서 자동이체 되는 장기저축(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등 적립성예금과 보험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보험 약관대출의 경우 채무 항목에 신고(소유자별 채무 1천만원 이상)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을 신고
 - MMF,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ELS, CMA, MMDA 등 간접금융상품은 예금항목에 등록
-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펀드인 “투자조합”은 금액이 크고, 사모방식으로 출자하므로 합명·합자회사 출자로 신고

- ▶ MMF(Money Market Fund)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
- ▶ 뮤추얼펀드(Mutual Fund) :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운용한 후 운용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형태의 펀드
- ▶ ELS(추가연계증권) : 증권이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
- ▶ CMA(Cash Management Account) : 고객이 예치한 예금을 CD,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돌려주는 금융상품
- ▶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취급하는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식 예금

- 유가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예수금)은 예금항목에 등록
-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 ‘비고(변동사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 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
- 연금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등록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기재
- 개인별, 계좌별, 그 용도별(수입용, 지출용)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

⑤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소유자별 증권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 및 제5호)

- 증권의 종류(주식, 국채 등), 발행인(종목명), 종목코드, 수량, 가액 등 보유 증권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재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기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필수로 기재
- 유가증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로 산정
 -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 평균가를 말하며, 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 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 (변동사유)'란에 기재 * 예시)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
 - 기타 비상장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
- ※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

〈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법 〉

① 기본방향

- **(실거래가격)**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평가액)**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액면가)** 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하는 경우 제외), ② 평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

② 실거래가격

-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 ① **(거래시기)**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매도 또는 매입)
 - * 해당 기간 중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함
- ② **(거래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재산등록사항을 고지거부한 사람 제외)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
- ③ **(거래규모)**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매매일 기준)의 1% 또는 매매한 주식의 합계액(액면가 기준)이 3억원 이상
 -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액면가는 주식발행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④ **(입증가능성)** 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등
- 다만,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

③ 평가액

-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신고

①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

1주당 당기순이익 가치	<p>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① ÷ 이자율(10%)②</p> <p>① 재산등록기준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2: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p> <p>* 각 사업년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p> <p>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p>
1주당 순자산가치	<p>(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총수**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p> <p>* 재산등록기준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금액 /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총수</p>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4/5

③ 1주당 액면가

- 해당 주식이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
- ㉠ 재산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 단, 기업이 회계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
- *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 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소명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회사에서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을 매매할 경우 (웹상품 등) 등록기준일 현재 개별주식을 신고('비고(변동사유)'란에 '웹상품' 표시)
※ 예금항목으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증권회사의 융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주식과 채무(융자금)를 별도로 각각 신고
- 재산공개대상자인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법 제6조의2)

▶ 주식거래내역서 제출(재산공개대상자)

- 신고대상자 : 재산변동신고 대상기간 중 주식거래를 한 재산공개대상자
- 신고시기 : 정기변동신고·퇴직신고·의무면제신고 시
- 신고대상주식 : 다음의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본인 및 친족의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 모든 주식거래내역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 주식)
- 신고방법 : 주식변동신고서에금융기관이발급하는위탁계좌번호, 주식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
- 신고예외 : 백지신탁계약을 체결·신고한 경우에는 해제할 때까지 주식거래내역 신고대상에서 제외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주식은 그 신탁계약을 해제할 때 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에서 제외(법 제14조의4제4항)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을 기재
- 받을 주식의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가액을 산정하고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임

⑥ 채권·채무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채권·채무(법 제4조제2제3호라·마목)

-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을 기재

※ 전세권(임차권)은 채권항목이 아닌 ‘부동산(건물)’항목에 신고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채무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고, 채무의 사용처를 기재
 - 카드로, 자동차 할부대출 등 각종 대출 명칭을 불문하고 신고
 - ※ 현금서비스 및 물품 할부구입의 할부잔액은 대출금에서 제외
- 신규 발생한 사인 간 채권·채무는 발생사유, 일자, 채권(무)자와의 관계, 사용처,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가족 사이에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발생한 채권·채무도 신고대상임
 - ※ 부모 등의 자금으로 자녀 명의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
 - 타인의 요청에 의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대출하였으나, 타인이 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인간 채권으로 신고(반대의 경우에도 동일)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사인간 채권·채무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필수로 기재
- 선거자금을 위해 다수의 사람과 설정한 채무(일명 '선거펀드')의 경우 채권자는 대표 1인 외 00명으로 입력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 기재

⑦ 금·백금·보석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은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석류는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법 제4조제2항제3호바·사목)

- 금·백금은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보석류는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 '비고(변동사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 매매 등 거래를 통해 구입한 경우 '실거래가격'란에 취득가액을 기재

⑧ 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법 제4조제2항제3호아목)

- 도자기·회화·서예·공예·조각·수예·철기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골동품 또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을 망라하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명세를 기재
- 가액은 재산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 '비고(변동사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⑨ 회원권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법 제4조제2항제3호자목)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면적도 기재
- 회원권(골프회원권 제외)은 가액에 취득가격을 기재

▶ 골프회원권 가액산정방법

- ① 최초신고 :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
- ② 변동신고
(신규취득)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기존신고)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던 골프회원권은 최근 시가표준액을 반영하고,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한 골프회원권은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

⑩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을 등록
-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비고(변동사항)'란에 소득원인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⑪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법 제4조제2항제4호)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출자가액과 출자지분 및 연간 매출액 등 정보를 기재
- 출자지분에 대한 매해 이익금이 소득에 해당되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출자액을 가액으로 등재토록 한 것임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필수로 기재
- 투자한 회사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주식회사이면 '주식' 항목에 신고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 출자지분으로 신고
- 「상법」상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등록대상이 아니며, 사업 관련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채무 등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 기재

⑫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액(법 제4조)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말하며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 및 직무 등을 기재
-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신고
※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또는 펀드 등은 신고 대상 제외
- 교회나 종중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의 소유이나 등록대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인 경우에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 기재

7 > 재산등록 현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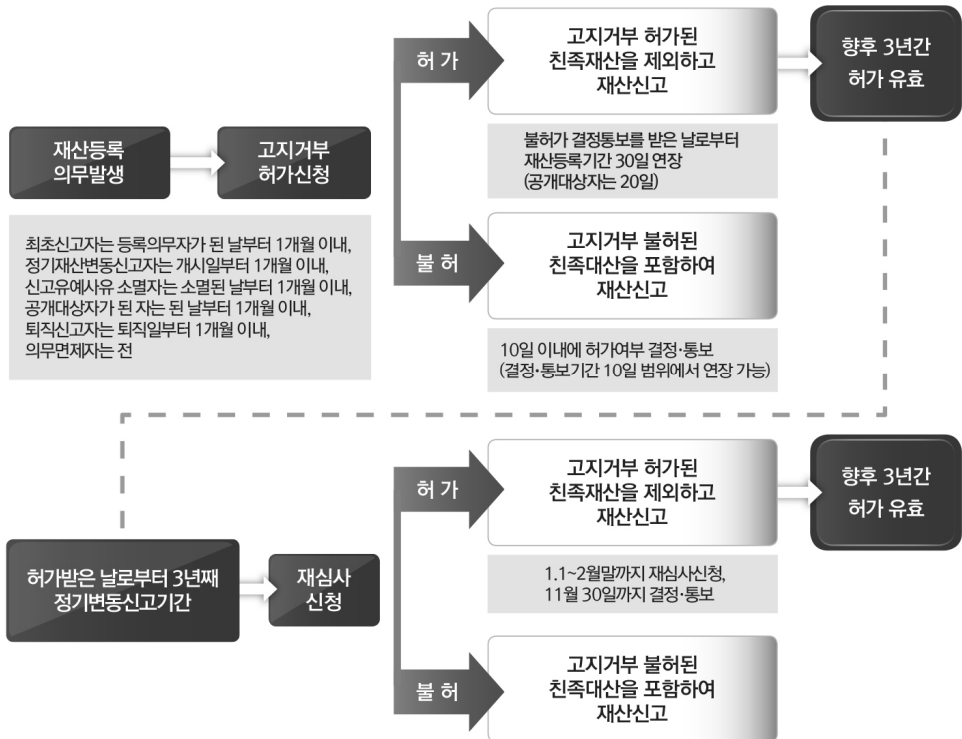
- 등록기관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지방관서가 등록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종합하여 보고, 영 제8조)

- 보고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재산등록 현황보고서

8 > 고지거부제도

■ 고지거부란?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임(법 제12조제4항)



■ 고지거부 신청 기간 및 심사 등

(1) 고지거부 허가 신청(법 제12조제4항, 영 제27조제1~2항 및 제3항)

- (신청대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자기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기존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 포함)
- (신청기간)
 - 최초 재산등록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재등록 의무자 포함)
 - 정기 재산변동신고자 : 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매년 1월31일까지)
 - 신고유예 사유 소멸자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신고자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퇴직자 :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의무면제자 :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심사결과통지)
 -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영 제27조제2항)
 - (불허시 등록기간 연장) 재산등록기간을 불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공개자는 20일) 연장한 것으로 간주(영 제27조제4항)
- (유효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2)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법 제12조제4항, 영 제27조제5~6항)

- (신청대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이전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자로서 계속해서 자기재산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
- (신청기한)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1월~2월)
- (심사결과통지)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 결정 통보
- (유효기간)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 시부터 3년간

■ 제출서류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규칙 제12조, 별지 제14호 서식) 및 독립생계 관련 증명자료 등

■ 고지거부 허가요건

(1) 피부양자가 아닌 자 일 것(영 제27조의2제1항)

-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함

(2)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것(영 제27조의2제2항)

- 직계존속의 경우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11)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영 제27조의2제2항1호)
- 직계비속의 경우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영 제27조의2제2항2호)

※ 고지거부 허가 심사 세부 기준은 해당연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지침을 참조

■ 고지거부 허가권자

- 원칙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예외 :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수임기관)
 - 고지거부 심사도 심사업무에 해당하여 기존 심사업무와 같이,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고지거부 심사를 수임기관에 위임('07.5.3. 제147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 고지거부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 관련

- 고지거부 신청서를 누락하고 증명서류만 제출하여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신청 대상자(직계존비속)의 서명(날인)을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것으로 대신하여 잘못 서명(날인)
- 고지거부 신청 사유 누락(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신청사유 기재)

- 고지거부 신청기간 경과(각 윤리업무 담당은 고지거부 신청기간을 등록의무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신청기간이 경과 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최초신고자, 신고유예 복귀자, 재등록 대상자에게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안내!!

- 증빙자료 미제출(신청기간 내 증빙자료 미제출시 반려 처리)

(2) 심사 관련

- 고지거부 대상자의 주소 및 가구원 수 확인
 - 독립생계 소득기준 적용을 위해 거주지역(도시, 농촌) 및 가구원 수 확인
-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시 독립세대 구성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기간이 등록기준일(재심사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는 소득증빙자료가 아니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로 다시 제출받아 심사
- 동일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재산소득과 임대소득은 중복하여 합산 불가
- 고지거부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부동산 재산소득은 불인정

9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제도개요

- 재산등록 의무자와 가족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조회·제공하여 등록·신고 편의성을 도모함
 - ※ 기존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만 적용되었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16.6.30.이후 재산등록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수시신고(최초, 퇴직, 의무면제, 공개자로의 승진 등)에도 적용됨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등록의무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을 받으려면, 등록의무자는 정보제공동의서를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영 제5조의5제1항)

- 정기변동신고 : 정기변동신고 개시일 1개월 전까지(매년 11월 말)
- 수시신고 :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단,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는 그달의 15일까지)
※ 8.20 등록의무 발생시 9.15까지, 10.1 등록의무 발생시 10.15까지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동의서에는 등록의무자와 동의자의 인적사항(등록의무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동의확인 서명 등)을 반드시 기재
-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작성 가능(영 제5조의5제3항)
-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등은 후견인(법정대리인) 증명서 제출 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당연 법정대리인이므로 별도 자료 필요 없음
-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영 제5조의5제2항)
-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6.6.30.) 전에 제출한 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 시에만 활용가능한 동의서로, 2016. 6. 30. 이후 인사이동으로 퇴직 또는 의무면제 등 수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 제출 필요

■ 처리절차(윤리업무 담당자)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접수·확인 및 명단 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동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일일이 대조·확인(수시신고시에는 매월 15일까지, 정기신고시에는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안내)
- 정보제공 요청을 위해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작성
 - 금융조회 대상자는 동의서를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정되며,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된 친족과 동의 철회자는 명단에서 제외

〈 동의서 관리 및 보관 〉

-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는 조건표를 붙여 잘 정리하여 비치하고 금융기관이 사후 확인요청 시 팩스나 우편으로 적극 제공
 - 금융기관이 명의인의 동의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동의서 사본(필요시 원본) 또는 전자적 매체를 금융기관에 제출
- ▶ 등록의무자의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는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를 여러 장(또는 여러 번) 제출한 경우에도 모두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
- ▶ 동의자 인적사항이 추가·변경되었거나 철회되었을 경우 최종 동의서만으로 동의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모든 동의서와 동의철회서가 필요함

(2)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취합 및 조회 요청

- 금융기관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수시는 익월 10일경, 정기는 다음 해 1.15까지 회신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절차 생략 가능
- 인사혁신처는 금융기관에서 회신한 금융정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시는 익월 16일경, 정기는 다음 해 1.20 이후부터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 재산신고에 활용토록 함
 - ※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수시 사전 조회를 위한 업무 처리 일정은 매년 별도 안내함

II 재산공개

1 공개대상자(법 제10조, 영 제24조)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원장및차장등국가의정무직 공무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③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⑥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 ⑦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⑧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 ⑨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⑩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⑪ ③부터 ⑥까지, ⑧,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 다만, ④·⑤·⑧ 및 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
- ⑫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영 제24조제3항) 〉

- ▶ 고위공무원단(가등급)에속하는일반직·별정직공무원에상당하는직위에보직된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과 위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영 제24조제4항) 〉

-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하며(영 제3조제3항) 공개하는 공직유관 단체의 임원은 매 반기 말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함
- ▶ 지정기준
 - 1)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단체의 장

⑭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2 공개시기 및 내용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법 제10조제1항)
-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법 제10조제1항)

3 공개주체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개(법 제10조제1항)

공개대상자	공개주체	비고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공무원 행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의원, 광역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광역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기초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개대상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 공개대상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개대상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위 및 각급 선관위소속 공개대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4 재산등록(신고)에 따른 공개

■ 최초신고사항 공개

- 신규임용 등으로 최초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 제5조제1항),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법 제10조제2항)

예)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검사 → 검사장 / 소장 → 중장

■ 변동신고사항 공개

- 정기변동 신고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다만, 최초 재산등록 후 또는 재등록 신고 후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 공개대상자가 공직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거나 전직된 경우

예) 대학의 총·학장(등록의무자) → 평교수(의무면제자)

- 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된 경우

● 재등록의무자 변동신고

- 공개대상자에서 전보·강임·강등 등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전직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
-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임용된 경우

● 재공개자 변동신고

- 공개대상자가 등록의무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공개대상자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자

※ 공개대상자가 전보 등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가 아닌 직위로의 이동)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으므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음

● 퇴직자 변동신고

- 공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 재산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법 제10조의2) 〉

▶ 공직선거후보자(법 제10조의2제1항)

- (대상)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 (제출내용)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 재산을 후보자등록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공개시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공고 시

▶ 국회 임명동의 공직자 및 국회선출 공직자(법 제10조의2제2항)

- (대상) 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
- ② 헌법재판소재판관(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3)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
- (제출시기)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시 국회에 제출
- (제출기관) 국회
- (공개시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공개

※ 단,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에 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5 재산등록의무자 공개목록 작성 방법

■ 작성시 유의사항

- 재산등록 내용 중 재산의 누락오기와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 재산의 누락·오기는 총괄표에서 수정, 보완 가능
-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가액변동 없음”으로 자동생성되며, 재산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간단히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문중재산은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
- 비고란 및 변동사유란 작성 시 유의사항
 - 재산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변동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의 취득일자·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 기재 가능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 가능
 - ※ 토지 또는 건물을 매도하여 예금에 입금/예금 인출 후 토지 또는 건물 매입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 가능
- 최초재산등록사항 공개 시에 별도의 소명내용을 함께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간략하게 소명사항을 작성

■ 재산항목별 수정 및 확인 사항

- 소속·직위·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 재산등록(신고)시 소속 및 직위 등이 맞는지 확인
 - 장성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기재하고, 직위의 기재는 생략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고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 지방자치단체의원의 경우 소속은 도(시·군)의회, 직위는 의원으로 기재
 - 변동사유가 의무면제, 퇴직자의 경우는 직위 앞에 (전)으로 기재

● 토지

- 공유재산의 경우 권리명세란에 총면적, 지분면적을 표시하고 금액은 지분에 대한 금액만 기재하며 비고란 또는 변동사유란에 지분 표시
- 지목이 임야의 경우 “산 번지” 형식으로, “산” 포함 여부 확인

● 건물의 주소지 표시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지의 일부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차량번호나 제조 회사명(현대, 기아, 혼다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채무

- 사인간 채권 또는 사인간 채무인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미기재 확인

● 고지거부자 및 등록제외자 표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한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고지거부사유‘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표시되었는지 확인
-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등록제외’라는 사유가 잘 표시되어있는지 확인

〈 공개 시 유의사항 〉

- ▶ 신고서의 종류(최초, 변동신고서), 변동사유(신규, 승진, 의무면제 등), 공개직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산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하여 공개시기에 늦지 않도록 주의
- ▶ 신고재산 금액이 큰 경우 단위 착오로 잘못 신고되었는지를 의무자에게 유선 확인
- ▶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시스템상 붉은색 표시)에는 반드시 공개목록을 다시 생성
- ▶ 관보 다운로드 후 최초신고서, 변동신고서 순으로 편집하여 공개
- ▶ 재산등록신고서와 공개목록을 대조·확인하여 재산이 누락·오기되거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Ⅲ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1 제도개요(법 제10조, 제27조, 영 제26조, 규칙 제11조)

-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등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비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철저히 보호
 - 등록의무자 본인이 자신의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없도록 제한

2 허가사유(법 제10조제4항)

- ①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회 등에서 재산등록사항 자료 요구 시 허용범위 〉

- ▶ 국회의원이 개인자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 할 수 없음
- ▶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허용 범위는?
 -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보호 차원에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인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3 > 허가권자(영 제26조)

허가권자	허가 대상	비고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등 자료 요구,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관할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 등록기관의 장
등록기관의 장	등록의무자이었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관할이 공직자윤리 위원회로 변경된 경우 : 공직자윤리위원회

4 > 허가신청 및 처리기한

- 열람·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공문 신청 및 허가신청서 제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열람·복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함

5 > 위반시 제재

-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공직자윤리위원회, 법 제22조 본문 및 6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

참고 재산등록사항 열람·복사 허가신청 대상 및 증빙자료

구 분	대상 등록자	대 상	제출 증빙자료	비 고
법 제10조 제4항 제1호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 였던 자	·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로 재판상 필요한 경우	· 사건번호, 범죄명, 피의자 (피고인) 등이 포함된 수사 사건기록부, 공소장 등	증빙자료 없이 단순 자체 감찰, 내사를 위한 신청은 불허
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 였던 자	·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 요구 등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 관련 규명이 필요한 경우	· 의무자가 구체적 비위사건과 관련한 증빙자료 － 범죄명, 피의자(피고인, 피내사자) 등이 지정된 자료	국회 본회의, 위원회 등 의결을 거쳐 자료 요구하여야 하며, 국회의원 개별적 요구시 불허
법 제10조 제4항 제3호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 였던 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 비위 사건 관련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의무자가 구체적 비위 사건과 관련한 증빙자료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장의 결재 필요
법 제10조 제4항 제4호	등록의무자 였던 자	· 본인의 등록사항 열람·복사 요구	· 등록사항(열람·복사) 허가 신청서 제출	별지 제12호 서식

IV 위반시 제재

1 > 재산등록 거부죄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 제6조 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호 및 제3호)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제1항)
-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4조제2항)

2 >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2호)
-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호)
- 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함(법 제30조제4항)

3 > 성실등록의무 위반

-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제1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7호)

- 이를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2호)
 - 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함(법 제30조제4항)
-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심사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하여야 함(법 제8조제7항)

4 > 주식거래내역 신고 등 의무 위반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증감원인 등의 소명자료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3호)

5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기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9호)

6 >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0조제3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6호)
-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

7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0호)
-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제1항)

8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위반

-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2)
- 심사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심사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하여야 함(법 제8조제7항)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2.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
3.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본인, 배우자 등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군무원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장, 관세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법 제8조의2제6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
-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9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의무 위반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4조의3)
-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제2항)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법 제28조제3항)

10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로부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5조)

11> 출석거부의 죄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26조)

12> 거짓 소명 및 소명요구 거부 등의 죄

-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법 제8조제13·14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법 제22조제4·5호)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13>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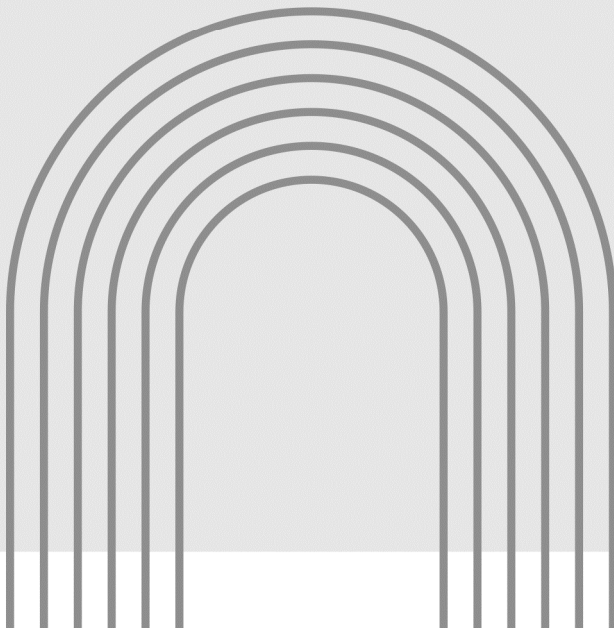
-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법 제12조제2항)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여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호)
- 이를 위반하여 재산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3호)
 - 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함(법 제30조제4항)

- 심사결과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심사에 응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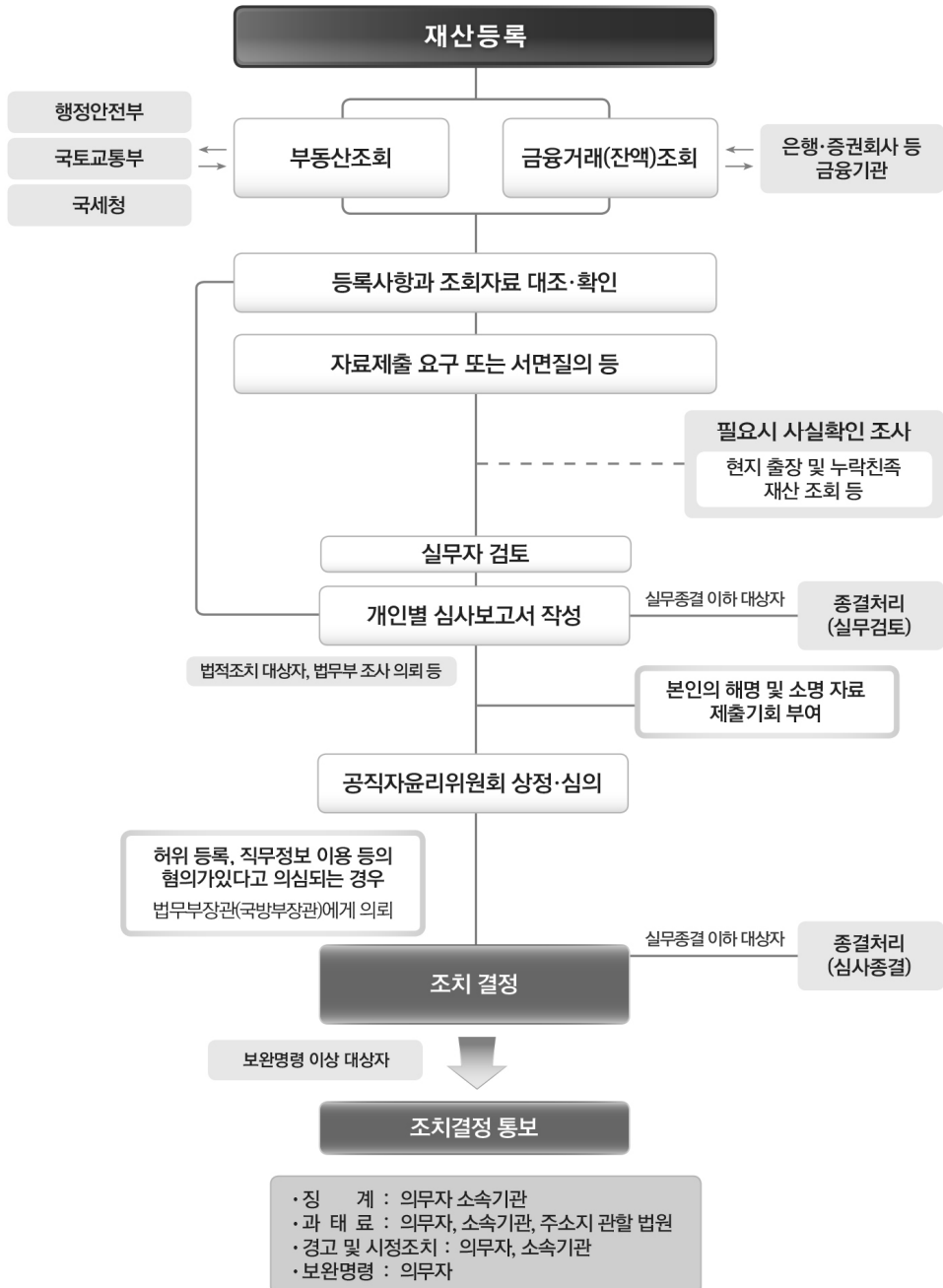


제2장

재산심사



I : 재산심사 개요

Part
1재산등록
및
심사

1 > 심사의 내용

■ 재산등록사항 심사

-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법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법 제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재산형성과정 심사

-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에 대하여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법 제8조제1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
- 직무관련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
- 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과다 증감 여부

2 > 심사기한

■ 재산공개 대상자(법 제8조제10항)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
- 단, 공개 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대상자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중 심사가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임기관 심사대상 중 법적조치 이상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9월말 이전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함

3 > 재산심사 필요조치 사항(위원회의 권한)

■ 보완명령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을 때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음
(법 제8조 제2항)
-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보완신고서를 제출(영 제10조제1항)

■ 소명요구

- 재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서면질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법 제8조제3항 및 제13항)
-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답변서 제출(영 제10조제2항)등

■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음(법 제8조제4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자료 또는 답변서 제출(영 제10조제3항)

■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 재산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하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함(법 제8조제5항)

〈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 범위(영 제10조의2) 〉

- ▶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요구가능
- ▶ 요구사유
 -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 관계기관 자료제출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영 제10조제3항, 법 제25조)

■ 출석요구

-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음(법 제8조제6항)
 -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로 함(영 제11조제1항)
 - 등록의무자 및 관계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해야 함(영 제11조제2항)
 - 2회 이상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음(영 제11조제3항)
 -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질문 및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영 제12조제1항), 등록의무자는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채택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함(영 제12조제2항)

■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함(법 제8조제7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 등록의무자에게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8조제13항)

〈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 사유(영 제14조의2제1항) 〉

-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 ▶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 ▶ 위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8조제13항)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영 제14조의2제2항)
 - 분실·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 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증빙자료대체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영 제14조의2제3항)

4 심사결과의 처리

■ 법적조치

- 심사결과 ①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 ②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 ③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조치

(법 제8조의2제1항)

- 법적조치사항(법 제8조의2제2항)

- ① 경고 및 시정조치
- ② 과태료 부과
- ③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 ④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음
(법 제8조의2제4항)

- 조치결과의 통보

- 법적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8조의2제5항)

-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보

- 재산심사결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영 제15조)

■ 중대한 과실의 판단

-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법 제8조의2제3항)

■ 타 법령 위반사항 조치

- 법적조치 대상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조세관련 위반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법 제8조의2제6항)

5 심사관할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심사대상자(법 제9조제2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 4급(5급) 이하에 대한 심사 : 수임기관 위임심사 •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장 •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시·도 교육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 시·군·구 의회의원 • 시·군·구의 4급 공무원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관위공직자윤리위원회

■ 심사권의 위임

(1) 심사권 위임내용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법 제8조제11항)
- 위임에 따른 위원회권한 준용 사항(법 제8조제12항)
 - 보완명령, 소명요구,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직무상비밀이용 혐의자 조사의뢰 등

(2) 수임기관의 기능

- 위임받은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재산 심사
 - 〈 위원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능 〉
 - 경미한 누락 재산에 대한 보완명령(법 제8조제2항)
 -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질의, 소명요구 및 해명·소명기회 부여(법 제8조제3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법 제8조제4항)
 - 재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출석요구(법 제8조제6항)
 - 〈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
 -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법 제8조제5항)
 - 심사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취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군인,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의뢰(법 제8조 제7항)
-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 법적조치 대상자에 대한 위원회 상정
 - 법적조치는 위원회의 권한사항이므로 수임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음
 - 법적조치 대상자, 법무부 등 조사의뢰, 금융거래내역 자료제출 요구 건 등은 매월 말 기준으로 취합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
 - 심사결과 상정시 관련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 등 심사자료 첨부

(3)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 심사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영 제13조제1항)
- 심사결과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영 제13조제2항)
 -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 심사개요
 - 심사결과(조치의견 포함)
 -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II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1 재산심사 절차

심사절차	주요 내용
가. 심사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자 전원 심사대상으로 선정 - 비공개자 선별 심사이 '비공개자 집중심사 대상자선정기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심사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동의자는 기존 사전조회 자료 활용 - 정보제공 비동의자는 대상자 확정 후 관계 기관에 자료 조회
다. 심사실시	
① 기본사항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일, 신분변동 사유, 직계존·비속 등록여부, 재산 종류별 기재사항 등 확인
② 항목별 대조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등록사항과 확보한 심사자료의 대조·확인
③ 소명 및 자료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누락·과다 사항, 소득 대비 과다 재산증감 사유, 기타 법적 위반 사항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 요구
④ 사실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소명서와 증빙자료 확인 - 필요시 현지 출장하여 사실관계 확인
⑤ 심사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조심사 결과, 소명자료 등 검토 후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실무검토의견 작성
라. 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는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
마. 심사결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결과에 따라 의무자,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법원 등)에 통보

※ 공직윤리시스템(이하 PETI)을 활용

2 단계별 세부사항

Part 1

재산등록 및 심사

■ 재산심사대상자 선정

- 공개자는 전원 심사대상자로 선정
- 비공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원을 심사대상자로 선정
 - 다만, 심사대상자의 수가 많아 전원 심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 최대 3년 동안 1회 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결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수임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른 재산심사 방침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부동산 등 자료조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자료조회 의뢰

■ 심사자료 조회 및 확보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로 사전 자료조회를 이미 실시한 등록의무자의 경우 기존 사전조회 자료를 심사시 활용(법 제6조제9항)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자는 자료 조회대상자로 선정 후 심사자료 조회 및 확보
 - 선정된 자료 조회대상자에 대해 재산등록신고서의 친족사항에 기재된 재산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명단 작성
 - 조회대상자에 대한 자료조회는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으로 조회 의뢰(법 제8조제4~5항)
- 자료조회 및 회신자료 확보방법
 - 자료 조회 및 회신은 PETI시스템 이용

재산항목	제공 기관	비고
토지	□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 중앙행정기관(하위 수입기관제외) 자료조회대상자	공문 의뢰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지적과) - 지자체, 하위 수입기관 자료조회 대상자	
건물	□ 행정안전부(인프라건축과)	공문 불필요
회원권	□ 국세청(조사기획과) - 중앙행정기관 자료조회 대상자	공문 의뢰
	□ 관할 지방국세청 - 지자체, 하위 수입기관 자료조회 대상자	
자동차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공문 불필요
예금(보험) 주식, 채무	□ 200여개 금융기관	공문 불필요

〈 금융기관에 자료 의뢰시 유의사항 〉

- ▶ PETI시스템에 관인 미등록기관은 별도 공문으로 요청
- ※ PETI시스템-[위원회]-[관인관리] 에서 관인 등록여부 확인
- ▶ 자료요청 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와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서」(대상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비용」 지급

-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통보방법 : 등기 또는 일반우편
- 통보비용 : 등기비용 2,000원, 일반우편 380원('20년 기준)
※ 우송료 실비로 지급 가능
- 청구 및 지급 : 금융조회 회신공문에 통보방식·인원·비용 등을 기재하여 청구한 금액을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급

■ 심사 실시

(1) 재산등록 기본사항 확인

- 등록기준일, 신분변동 사유(정기변동, 승진, 퇴직 등), 직계존·비속 등록여부, 재산의 종류별 기재사항 등 확인

(2) 항목별 대조심사(세부내용은 「3.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참조)

-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과 확보한 심사자료를 PETI에서 대조·확인하고, 자금 흐름 분석 등을 검토

※ PETI에서 대조 심사한 내역은 시스템상 자동처리된 것으로, 글자 하나만 틀려도 다른 항목으로 인식함. 따라서, 각각의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동일 자료가 누락·과다로 표시된 것은 아닌지 확인 필요

- 현금,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 병행

(3) 소명 및 자료제출 요구

- 재산등록사항 대조, 비조회성 재산 등록 여부, 재산형성과정, 타법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명요구사항 확정

● 소명요구 사항

- 신고 누락·과다 또는 허위 및 착오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자료제출 요구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및 주식투자 의혹이 있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주식취득 경위 등 요구
- 소득을 고려할 때 상식 이상의 불합리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재산수입·지출 내역 등 요구
- 기타 법적 위반 사항 및 소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간단한 내용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확인 가능

(4) 소명자료 검토 및 사실확인

- 주어진 기간 내에 소명서가 도착하도록 독려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소명 요구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소명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재산을 누락 또는 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도 잘못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도록 PETI에 반영
- 허위·은닉·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

(5) 심사보고서 작성

- 대조심사 결과 및 제출된 소명서를 확인하여 누락·과다 재산의 규모별로 「재산 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처분 결정 전 등록의무자의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당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중 또는 감경사항에 해당될 경우 처분 단계를 조정하여 최종 처분 결정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잘못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조회성 재산(사인간채권·채무, 현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비조회성 재산의 심사 및 처분기준을 적용

■ 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 심사결과는 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
-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인 직접 해명 및 추가 소명기회 부여할 수 있음

* 경고,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제30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인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결과 조치

(1) 심사결과 통지

- “보완명령”은 개인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므로 의무자에게만 공문을 발송
- “경고 및 시정조치”는 “경고장” 및 “심사결정서”를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발송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조치내용을 통보
-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는 등록의무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소속기관에는 “심사결정서” 및 “해임·징계 의결 요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치 요구
- “과태료 부과”는 해당의무자 및 소속기관에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관할법원에 “심사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

※ 공문, 심사결정서, 과태료부과 대상자 통보서, 재산등록 위반내역 등의 서식은 PETI - [재산심사] - [개별심사] - [심사결과 사후처리]에서 출력

※ 위 모든 처분 시 보완신고서를 생성하고 의무자에게 보완신고하도록 안내

(2) 타법 위반사항의 통지

- 재산심사 결과 거짓 등록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공문 발송하고,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결과 보고

* 법 제8조제7항 및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인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 재산항목별 심사방법

■ 친족사항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등록대상 확인
 - 등록의무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업 등 정확한 기재 여부 확인
 - 직계존속(부모) 사망 여부와 배우자 미등록 사유 확인
 - 친족란의 직업 기재내역 등을 확인하되 자녀의 유학, 취업사항 등에 대하여 타 재산항목과 연계하여 확인
 - 고지거부 대상 및 등록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추가 고지거부자, 딸의 출가, 가족 사망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확인
- 혼인한 자녀의 손자녀 신고 여부 확인
- 2009년 2월 3일 이후 신규로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여성의 경우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등록 여부를 확인
- 시부모를 등록해 온 여성의무자가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에는 친부모 재산을 신고했는지 확인
- 신고한 친족정보와 확인된 친족정보가 상이할 경우 누락친족 등록 후 친족사항에 대한 소명요청 수행
- 소명결과, 해당 친족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여 심사

■ 부동산(토지)

- 부동산등기정보 열람을 통해 명의자, 취득일, 거래금액, 면적 등 설정된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
 - 공유지분일 경우 소유지분에 대한 면적과 가액 확인
 - 가액은 “면적(㎡) × 개별공시지가”이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매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확인
 - ※ 토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 매도, 매입 중인 부동산의 적정성 및 적법성 확인
 - 매도한 경우 : 잔금을 받았더라도 등기이전이 안된 경우라면 신고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 매입한 경우 : 계약금만 지불하였을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등록해도 무방), 중도금 지불 시부터 등록하는 것으로 계약관계와 주고받은 총금액 등 확인
 - ※ (2018. 7. 2 이후 최초신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건물도 동일)
 - (재산변동신고) 신규 매입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는지, 종전가액을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가액변동 신고를 하였는지,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건물도 동일)
 - * 기존 등기부등본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2011. 4. 12. 변경

- 매도·매입 자금의 흐름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 토지의 매도·매입 신고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실거래액을 확인하여 재산의 증감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부동산 거래시 증여세·상속세 등 세금 관련 여부 확인
-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확인**
 - 상속절차는 마무리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과의 관계, 재산세 납부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
 - ※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정 상속지분을 소유권으로 신고
 - 본인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 재산인지 여부 확인(문중재산, 친목회비 등)

■ 부동산(건물)

- **부동산등기정보 열람을 통해 명의자, 취득일, 거래금액, 면적 등 설정된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
 - 면적 및 가액 기재의 적정성
 - ※ 아파트의 경우 토지(대지권)의 면적은 기재하지 않음
 - ※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대지 포함) 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기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총 가액(대지 포함)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사이트에서 확인
 - * 오피스텔은 전체, 상업용 건물은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
 - ※ 그 외 기타 건물 등의 가액은 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 으로 확인(시·군·구에 문의 가능)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 기재 여부 확인**
- **분양권의 경우 보유액란에는 등록기준일까지 불입한 총납부액을 기재했는지 확인 (총분양가는 괄호 안에 기재)**
- **재건축 중인 건물은 새로 분양받은 건물의 동호수를 배정받기 전에는 기존 건물로, 동호수 배정 후에는 분양권으로 신고했는지 확인**
- **무허가 건물 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으로 기재했는지 확인**

- 매도·매입 자금의 흐름이 정확한지 확인, 자금출처·사용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 소명 요구
- 건물의 관리형태 확인
 - 소유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임대차여부 및 임대채무 등록여부 확인
 - 본인 주소지 임차권 미신고 및 성년 또는 혼인한 자녀의 주소지 변동 신고가 없으면 주민등록정보 조회를 통한 전세권 누락여부 확인
 - 공실로 소명할 때 건물의 위치 또는 공실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증빙자료(관리비 납부영수증, 전기요금·수도요금납부영수증 등) 제출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 예금, 채무 변동 신고시 비교란에 자녀 전세권 및 주거 매입 등을 기재한 경우가 있으므로 건물, 토지란의 신고 여부와 대조 확인

유의사항

- ▶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를 건물란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토지란에 따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확인
- ▶ 면적의 “㎡”와 “평” 혼돈 착오기재 여부 확인
- ▶ 부동산 심사시 조회기관의 전산자료 확인결과 매도·매입 사실이 일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입력시점의 차이일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확인
- ▶ 부동산 거래의 경우 투기지역 거래, 위장전입 파약을 위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 주소지와 타지역 부동산 보유자 면밀 검토 필요
- ▶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재산증감 파약을 위해 실거래가 파약은 기본이며, 신고가가 공시가격과 비슷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사본 등 요구
- ▶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임대나 전세여부, 형성과정 확인시 참고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권리관계 및 가액 기재의 적정성 확인
 - 자동차 가액은 자동차보험증권 등의 차량가액을 확인하며,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전문가 평가액,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평가가액 등을 확인

- 자동차의 신규 취득시 자금출처(부동산 매도, 현금지출, 예금인출, 신규 채무 등)등 사실관계 확인

※ 자동차를 누락한 경우에는 조회금액(취득가로 조회됨)을 등록기준일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수정

유의사항

- ▶ 리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채무 및 보증액의 채권(리스회사)은 신고 여부 확인 필요함. 자동차 회사에서 구입자 명의로 대출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누락이 발생하므로 확인
 - (운용리스)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금융리스) 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 자동차 할부 구매 시 자동차를 신고하고 할부 잔액은 채무에 신고했는지 확인
-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이 단체장 명의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관용차량인지 여부 확인
- ▶ 조회자료의 차량가액은 자동차 취득가액이므로, 신고금액과 상이할 경우 차량연식 등을 감안하여 심사

■ 현금

● 현금 과다 보유 및 변동액이 클 경우 그 사유 확인

- 현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유 확인
- 개인별 보유 현금의 액수가 클 경우 또는 과도한 증감이 있는 경우 재산 흐름 분석 및 자금의 출처·사용처 등의 적합성 검토
- 특별한 사유(사업 등)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사유, 보관장소 등 사실관계 확인

■ 예금

● 가액 기재의 정확성 여부 확인

-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예금은 신고기준일 현재 평가액으로 기재
- 보험료의 경우 불입액 기재(만기환급금, 예상 해지환급금, 보상금 아님), 보장 기한이 지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불입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신고대상임

● 예금변동이 클 경우 비고란의 사용처 및 자금출처를 반드시 확인

- 증권회사의 예탁금과 간접금융상품(MMF,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추가연계 증권, ELS, CMA, MMDA)은 예금항목 신고대상임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 확인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잔액이 “+”이면 예금항목에, “-”이면 금융채무 항목에 신고했는지 확인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에 신고한 예금계좌도 예금과 동일하게 심사

유의사항

- ▶ 개인별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나, 계좌별 1천만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 ▶ 보험의 경우 저축성이 가미되어 있는 보험은 신고대상이며, 대부분의 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이 혼합된 성격임. 현실적으로 순수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정도이므로 대부분 보험은 신고대상이며 필요시 보험계약서 확인
- ▶ 보험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로 신고하여야 함
- ▶ 중도 인출한 보험의 경우 중도인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등록해야 함
- ▶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등록대상이 아님
- ▶ 사실상 의무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의무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친목회비, 동창회비 등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해야 함
- ▶ 고액 누락액의 경우 회신기관의 착오인지 확인 필요
- ▶ 증권사의 간접금융상품 및 펀드 등이 과다 신고된 경우 유가증권 항목란의 누락여부 교차 검토 필요
- ▶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은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별 확인 필요

■ 증권

- 수량과 가액의 정확성 여부 확인
 -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등록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 최종가격으로 금융거래자로 조회 내역과 대조·확인
 - 수량의 증감이 없어도 기준일 종가기준으로 가액변동사항은 신고해야 함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하는 랩상품 등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개별 주식을 신고했는지 여부 확인

-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을 경우 당해 신용융자금을 채무로 신고했는지 여부 확인
- 대량 거래 또는 주식 운용수익의 급격한 증감이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시점을 전후한 기업공시내용 및 유관정책의 입안·추진여부와 당시 직위의 직무 관련성 등 확인
- 제출된 거래내역 중 특정주식에 대한 집중투자(가족분산 포함) 여부를 파악하고, 재산변동신고사항과 연계하여 자금흐름에 이상이 있을 경우 투자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한 소명요구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법 개정(20.6.4.)에 따라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였는지 확인

유의사항

- ▶ 공개자의 경우 주식거래행위를 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식거래내역을 신고했는지 확인(법 제6조의2)
- ▶ 누락 유가증권 발견시 신고기준가액이 되는지 확인
- ▶ 주식거래 중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된 경우 직무를 이용한 취득경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 채권·채무

- 사인간 채권·채무를 재산 과다증감의 상쇄수단으로 활용하는지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 주소지 이외 보유 부동산의 임대채무 누락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확인
- 재산가치가 큰 건물을 지인으로부터 무상 임대차하였다고 소명하는 경우 확인 필요
- 보유재산에 비해 과다하게 대출이 증가된 경우(담보물에 비해 대출금이 많은 경우) 직위를 이용한 특혜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
- 과다한 채권·채무의 변동시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확인하고, 특히 부동산 관련 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분양권 등 신고여부 확인
- 사인간 채무를 장기간 변동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변제여부 확인

■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 최초신고시 실거래가, 시장가격,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등 기재 확인
- 사실확인이 곤란하나 등록내용에 따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하여 수사에 준한 조사 가능
- 법 제6조의4제2호 및 시행령 제5조의4에 의거, 변동신고시 보석류(금 및 백금 제외), 골동품, 예술품은 매매가 없는 경우 기존 신고가액 유지(평가의 곤란성 인정)
- 매도·매입이 있을 경우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이 적합한지 확인
-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대량 매입 및 매도시 소장용이 아닌 투자용으로 판단하여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 확인

■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의 회원권은 기재내용 및 가액 확인
- 콘도미니엄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기준가액(전당 500만원)이 되는지 확인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 및 분양을 하기도 하나 회원권으로 분류

■ 지식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신고는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지식재산권 유무 심사는 본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등록원부 등을 통해 확인
- 연간 소득금액 발생 여부는 확인 필요시 국세청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및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관계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이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재산변동 신고 사항 심사 시 참고로 활용
- 회사 출자금액과 그 지분비율은 회사 정관에 의하여, 연간매출액은 회사결산서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의 출연금액과 보유직위 등은 그 법인의 정관으로 확인 가능
- 출자금액을 가액란에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지분비율과 연간매출액 확인
- 출자지분, 출연재산의 증감이 있을 경우 자금의 출처·사용처 등이 적합한지 확인



PART

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선물신고



제1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I 개요

1 목적

-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적(公·私的)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주식을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Blind Trust)하여야 함

《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

고위공직자(신탁자)가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Trust) 금융회사(수탁자)는 신탁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경 신탁자가 변경된 자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Blind)함으로써, 재직 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

2 대상자 및 내용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 시장, 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
 - ▶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중 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및 관리 필요

■ 내용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제1항)

3 대상주식

-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영 제27조의4)

■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예외

- ①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면제를 받기위해 청구한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법 제14조의5제6항)
-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영 제27조의8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이상 '05.12.16.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기타 주식의 대상 여부 〉

1)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위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함
-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에서 **제외**
 - ※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에 포함

2)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여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대상 주식
아님

3) 이른바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

-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일임관리해주는 서비스(투자일임계약)로서, 주식의 실제 **운용은 증권사가** 하지만 법적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음
- 법적으로는 개인의 직접투자이지만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
-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 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 원 기준이 적용됨. 랩어카운트와 비교할 때 투자자문사와의 투자일임계약은 주식매매에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4 >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①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②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③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④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⑤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법 제14조의6제2항)
- ⑥ 공개대상자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⑦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II 주식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1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백지신탁을 하고, 매각·백지신탁신고서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 기관에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

신고대상자	재산등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지방자치단체 - 그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공직유관단체 감독 기관

〈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재산신고 요령〉

- ▶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재산변동신고 및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함
- ▶ 백지신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까지 그 신탁재산은 정기재산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 신탁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 중 연월일 및 신고의무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III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 체결시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수탁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해당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수탁기관

-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도 포함됨
-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수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

■ 백지신탁계약의 요건(다음과 같은 적격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후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 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됨

- 법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유(신탁재산이 3천만 원 이하로 하락,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중인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 제한

-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
-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법 제14조의6 제1항 단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주식취득사유(법 제14조의6, 영 제27조의9) 〉

- ▶ 상속
- ▶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 인수
- ▶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 행사
-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 취득
- ▶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행사
- ▶ 위 네 가지 사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 ▶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 행사

2 >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 최초 신탁재산의 처분

- 수탁기관은 최초 백지신탁된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
- 수탁기관은 60일 이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 연장 가능

※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 신탁재산의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 금지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에는 신탁자와 수탁기관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 및 정보제공 금지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대한 신탁자의 관여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의 면책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신탁재산 관리상황의 보고

-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
- 수탁기관은 매분기마다 신탁재산을 평가, 3천만 원 이하로 된 때에는 매분기말 경과 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함
- 수탁기관은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사유 및 1월 1일부터 해지된 날까지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

- 수탁기관으로부터 위의 보고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타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송부
- 등록기관에서는 해당 공직자가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수탁기관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 완료된 경우 처분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에 공개

3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①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 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수탁기관은 매분기별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3천만 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탁자에게 통지함
 - ②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하는 경우
 -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를 작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음
 - ③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④ 백지신탁 중 신탁자의 직위가 변경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 신탁자는 백지신탁 관리·운영중인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를 작성,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백지신탁 계약 해지 가능
 - ⑤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 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된 경우

IV :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1 >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청구사유 및 청구시기

● 원래 직위에서의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 청구

* 보직 변경, 소속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 변경 등

- 청구인은 의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변경을 신청,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을 완료한 후 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

※ 청구인은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인사혁신처에 전자문서로 심사 청구

■ 제출서류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 (담당직무 관련자료) 소속기관의 직제,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 의회위원 :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관할 기관(부서), 위원회 조례 등

●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거래내역서 등

※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 제출, 거래내역서는 지연청구 시 제출

● (청구사유 관련자료)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3년간 소속기관과 주식발행기업과의 공사·물품·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인·허가, 수사·재판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지연사유서)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연사유서를 함께 제출

■ 철회 및 각하

- (철회)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인사명령, 잔고증명서, 기타 관계서류 등)를 제출하고 심사청구 철회를 요청
 - ①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 ② 주식을 매각하여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된 경우
 - ③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주식이 아닌 것(채권, 수익증권, ETF, 종목당 3천만 원 미만의 랩어카운트,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²¹⁾ 등) 제외 시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을 알게된 경우
- (각하) 철회사유에도 철회요청을 아니할 경우 심사위원회 직권으로 각하 가능

■ 심사청구 후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조치

- 심사청구 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심사청구한 주식과 별도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 필요
- 다만, 심사청구한 주식과 동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중 “1. 보유주식내역”만 추가로 제출

2 >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결정사항의 통지

■ 심사결정사항의 통지

- 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 심사결정서 통지 시 조치사항 및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통보

■ 의무 이행사항 확인 및 공개

-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2개월 이내) 소속 대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등록기관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함

3 결정·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통지된 주식

①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백지신탁하여 3천만 원 이하로 조치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 재산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②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보유 가능함.
- 단, 주가상승, 추가매입 등으로 해당주식들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백지신탁하여 3천만 원 이하로 조치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 재심사 청구(또는 매각, 백지신탁)해야 하는 경우

①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승진·전보·상임위 변경 등 직무가 변경된 경우
 - ☞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하여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새로운(심사받지 않은) 주식을 3천만 원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② 직무관련성‘있음’ 결정된 주식을 총가액이 3천만 원 이하여서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기존 직무관련성‘있음’결정된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시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보유주식은 보유내역 작성 시 비교란에 기존 결정사항 별도 표시

③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 법 제14조의6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 및 영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재심사 청구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주의 사항 〉

▶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인지 여부 확인

- 채권, 수익증권, ETF, 종목당 3천만 원 미만인 랩어카운트,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등은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님

▶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인지 여부 확인

- 담당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 변경, 계약체결 등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후, 주식 발행회사와 본인의 직무관할에 속하는 부서 및 기관 간에 계약·협약, 조사·감사, 보조금지금 등 거래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해당회사의 5% 이상 지분을 보유시, 해당회사 주식 재심사 청구

▶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1원이라도 3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계산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필요

V : 직무 회피

1 > 개요

■ 내용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 관련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 사실을 사후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함

■ 적용대상

- 주식을 백지신탁하여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 회피 대상 직무

-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그 밖에 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 위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시행령 제27조의8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직무를 준용

3 직무회피 방법

-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참(관련 회의 불참, 결재·보고선 배제, 업무지시 불가 등)
- 지방의회의원은 보유주식 관련 안건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 금지 등

※ 위원회 등 회의에 다수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회의 참석 및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표결 등은 가능

4 직무회피의 예외 및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의 신고

■ 직무회피의 예외

-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백지신탁 또는 보유중인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 가능(법 제14조의11제3항)

■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의 신고

- (신고대상 및 시기) 직무회피의 예외'에 의해 이해충돌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관여 사실이 있는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및 신고기관)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에 의해 이해 충돌직무 관여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7 서식, 직무관여 내역 및 직무회피 불가능 증명 자료 첨부

-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치) 신고 받은 이해충돌직무 관여 사실을 공보에 게재

VI 의무위반 시 제재

1 주식백지신탁 신고 및 직무관여 위반 시 제재

■ 경고 및 시정조치(법 제14조의4제6항에서 제8조의2 준용)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2* 준용

* 법 제8조의2(심사결과에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 법 제8조의2를 준용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거나 직무관여 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백지신탁 해지사유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직위변경을 신청한 경우)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거나 직무관여 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법 제28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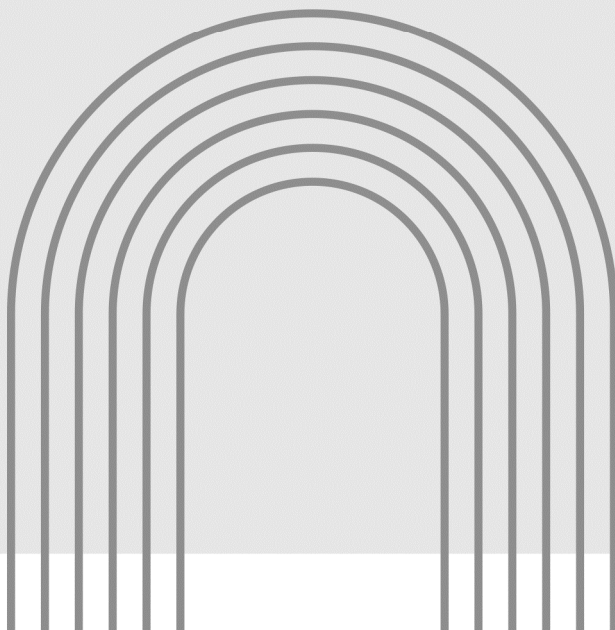
■ 다음의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위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는 경우



제2장

선물신고



I : 선물신고 개요

1 목적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선물관리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신고서 제출)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은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제출
 -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소속기관 ·단체의 장

(이관)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이관
 -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유지
 - * 선물이관 시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붙임 6)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유지
 - *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 문화적·예술적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기록원 이관
 -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해당기관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 매각

* 소속기관이라 함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2 > 선물신고제도 내용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법 제16조제1항)

3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4 > 대상선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II :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1 > 신고서 제출(선물받은 공직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감사담당부서)에 제출
 -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선물접수대장에 기록 유지

■ 선물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징계의결 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법 제22조, 제30조)

2 > 신고서 접수(소속기관·단체의 장/감사담당부서)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즉시 선물신고 접수

■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 결정

- 평가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선물신고 접수
- 평가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신고받은 선물을 선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

〈 선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예시 〉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 선물(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한다.
 - ※ 선물을 접수한 경우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3 > 선물이관 절차(등록기관의 장)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반기별로(상반기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함(영 제29조제1항)

※ 이관시 첨부 서류: 선물이관 공문서, 선물수령신고서, 선물사진 및 규격서 등 선물과 관련된 내용

-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29조제1항)

- 등록기관(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영 제29조제2항)

신고대상자별 등록기관 구분

선물신고대상자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시·도 및 시·군·구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감독 시·도 및 시·군·구

Part
2주
식
의
매
각
또
는
신
탁
및
선
물
신
고

Ⅲ 선물의 처분

1 > 처분대상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영 제30조제1항)

2 > 선물의 수령인에게 우선매도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영 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규칙 제15조제2항)

3 > 매각 대금의 처리

- 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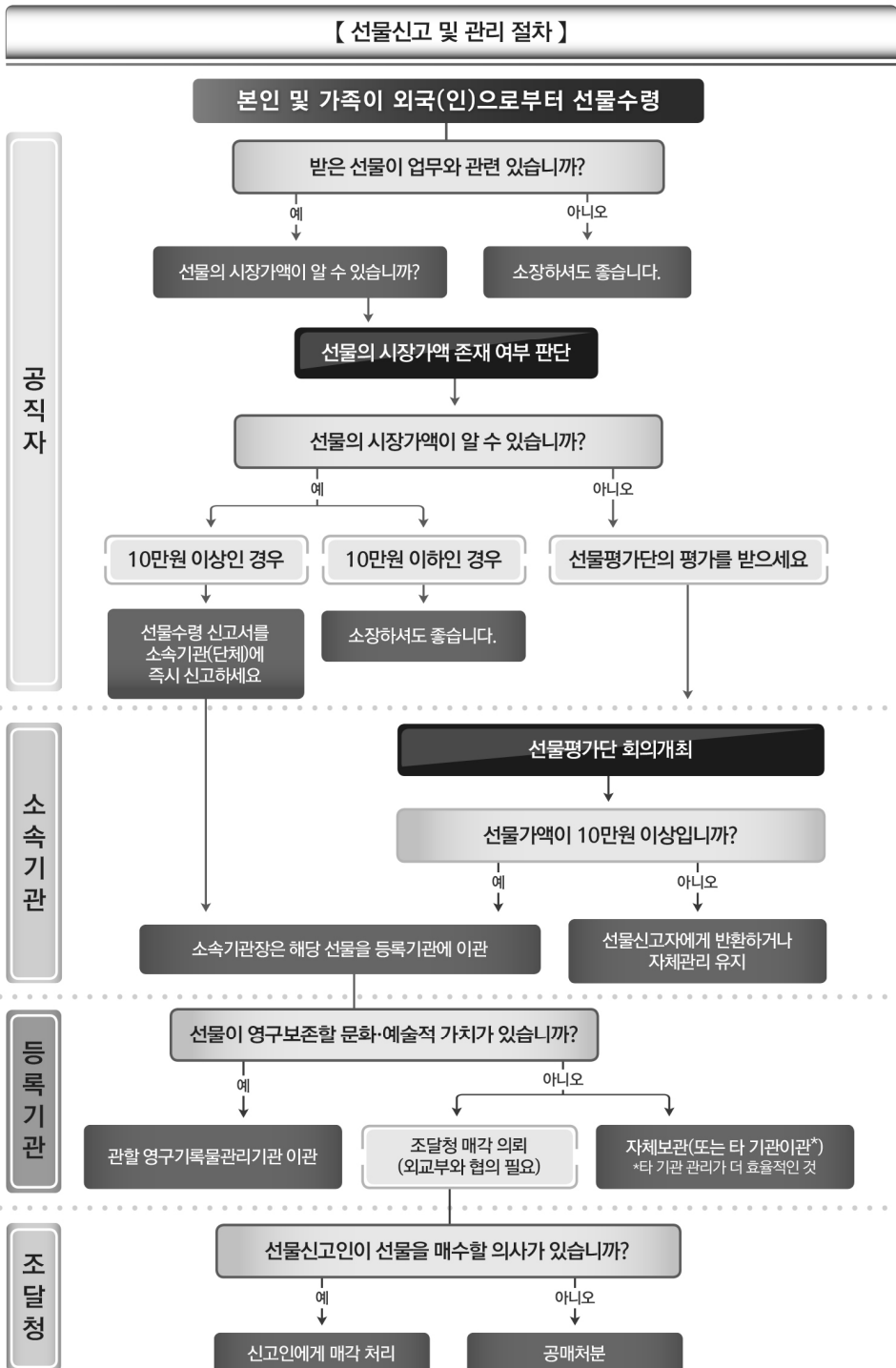
IV : 선물신고제도 운영강화

1 >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붙임 1) 연중 상설 게재
- 국외출장 공직자에 대한 선물신고 안내문 사전 주지 확행
 -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을 변경하여, 국외여행보고서 작성시 선물수령여부와 선물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15.11월부터)

2 > 보존중인 선물 관리 철저

- 보관 관리중인 선물의 연 1회 전수조사 실시
- 보관기관별 자체 기획전시 등 선물 활용도 제고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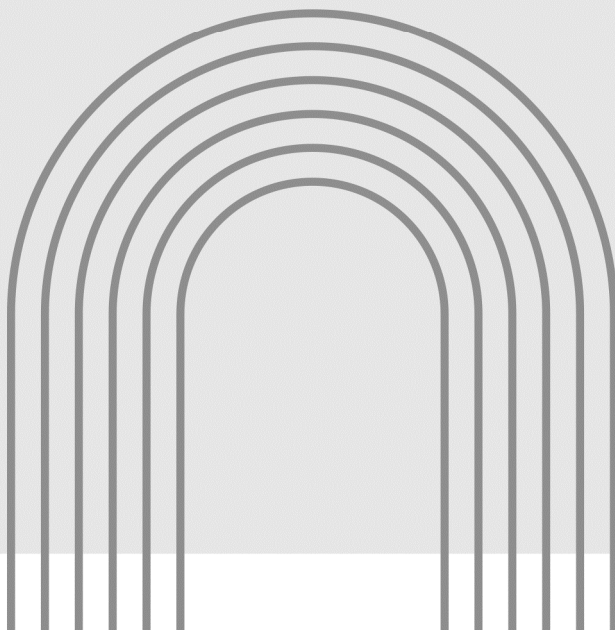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1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I 개요

1 목적

- 취업심사대상자인 공직자가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 업체에 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 공직윤리 확립

2 취업의 범위 및 취업심사대상자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가능
※ 공직자윤리법 개정(공포 2019.12.3., 시행 2020.6.4.)
- 취업심사대상자
 - (20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020.6.4. 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준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 3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징수, 계약,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및 그 밖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여부
- 취업심사대상기관(취업심사대상기관은 매년 12월 인사혁신처에서 관보에 고시, 단 협회는 6월말 고시)
 - 일정규모·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사립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
 - ※ 2020.6.3. 이전 퇴직공직자는 합작법무법인, 초·중등 사립학교와 그 설립학교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음
- 위반자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업의 범위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봄(법 제17조제4항)

■ 취업심사요건(법 제17조제1항)

- ① 취업심사대상일 것
- ② 퇴직일(또는 의무면제일)부터 3년 이내일 것
- ③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될 것

※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될 때는 취업심사받아야 함

※ 행정소송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됨(법 제19조제3항), 다만 취업제한결정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진행)

■ 취업가능 요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 시 취업가능

■ 취업심사대상자

- 정무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 공무원(별정직 포함)
- 특정분야(감사부서,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 부서, 회계부서의 회계관직 공무원,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등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7급이상 5급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포함)
- 소방장이상 소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 취업심사 면제대상(영 제31조제2항)

-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포함)과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면제

※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취업심사 면제 규정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20.6.4.)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분 류	개 요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 * (예시) 보험 중개인, 대출상담 모집인, 인쇄 영업원, 건설수주 영업원 등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작물을 재배·수확 등 * (예시) 조경원, 임산물 채취 종사원, 양식원, 해녀 등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 * (예시)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제빵사 등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제품 조립 * (예시) 자동차 조립원,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용, 철도 기관사 등
단순노무 종사자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예시) 택배원, 청소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검표원, 가사도우미 등

3 > 취업심사대상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 규모·범위

- 일정규모·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사립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

※ 2020.6.3. 이전 퇴직공직자는 합작법무법인, 초·중등 사립학교와 그 설립학교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음

구분		지정기준	적용대상
영리 분야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모든 취업심사 대상자
	법무법인/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협회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해당 법인·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포함)	
비영리 분야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 하는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기관	
	사립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	
'20.6.4. 추가	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
	초·중등 사립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 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방위산업분야	방산업체와 최근 3년간 중개수수료 (무역거래건당 200\$ 이상) 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식품·의약품 등	식품·의약품등과 관련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 수행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정 및 고시

-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협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영 제33조제6항)

※ 다만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협회라도, 취업심사신청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 포함)의 경우,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해당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에 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전산 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협회의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33조제7항)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 및 법 제17조제1항제1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영 제33조제6항 단서)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단체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단체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단체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4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적용대상

- 3급 이하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제외한 자

❖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적용대상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적용대상자(법 제17조제2항)

- 3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영 제32조제1항제1호)

-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 포함)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 해당 과의 업무
-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 * 국장은 국 전체의 업무, 실장은 실 전체의 업무
- 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속하였던 부서에 포함하여 심사

■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적용대상자(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영 제32조 제3항)

-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이상의 공무원
-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
 - *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영 제32조제1항제2호)

- (중앙행정기관 등*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

- * 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④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포함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2급 이상과 3급 이하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적용

※ 광역의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은?

- ▶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므로, 퇴직 전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전체의 업무(각 상임위 포함)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5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제5항)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봄

-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재정보조 등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기준·평가항목 등 결정, 신청서 접수·심사, 보조금액 등 확정·지급·정산 및 후속조치(평가·감사)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신청서 등 접수, 인·허가 등을 위한 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시험평가, 인·허가 등 의사결정, 인·허가 등 관련 사후 관리·감독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검사·감사계획 등 수립,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결과처분 검토 및 결과처분 통보, 후속조치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계획 등 수립, 대상 업체 선정, 조사인력 편성, 조사, 조사결과 정리 및 확인, 조세의 부과·징수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기본(사업)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제안서 검토·평가,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감독·검사·검수 등), 대금지급, 후속조치(평가·감사 등)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검사·감독 등 계획 수립,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심리·처분 검토,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취업심사대상기관(법인·단체 등)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특허·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심판·심결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⑧ 그 밖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영 제32조제2항) 〉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정책 등의 수립·조정·시행·평가·감사·후속조치·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처리
 - 정책·사업 등의 검토·결재 또는 안건 검토·심의 등을 위한 회의참석 등의 의사결정 관여
 - 검토의견 제출 등 업무처리 협조, 정책건의·반영, 민원처리 등 다양한 형식·모습으로 특정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6 취업제한의 예외

■ 취업승인

● 승인내용

-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음 (법 제17조제1항 단서)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취업승인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영 제34조제3항)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 (제1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제2호)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호)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제6호)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제7호)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제8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제9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이중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승인하여야 함(영 제34조제4항)
다만, 제6호의 경우는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에 한함

■ 자격증 소지자의 동종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제7항)

※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른 분야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예, 변호사 → 회계법인·영리사기업체, 세무사 → 법무법인등)

II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1 >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승인의 비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개념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조사·판단하여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심사 기준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심사대상 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특별한 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 심사
요건	①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①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면직된 경우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 또는 협회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⑨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2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절차

퇴직 공직자

-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소속부서 (기관)

-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 업무관련성(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5일 이내 이송
(인사기록카드, 사무분장표 등 포함)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 검토의견서 보완·작성
 -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5년) 내 여러 기관을 근무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업무관련성 여부 함께 검토
-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심사결과 통지

- ▶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요청인(신청인), 소속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 단체)에 각각 통지
 - 취업이 제한 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3 취업제한여부(취업승인)의 검토사항 및 제출서류

■ 확인·조사 및 검토사항(영 제33조3제1항)

① 취업심사대상자 및 취업심사대상기관(협회) 해당 여부

※ 협회는 그 회원사에 인사혁신처장이 확정·고시한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만이 심사대상이 됨

②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조사

※ 밀접한 관련성 업무범위(법 제17조제2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취업승인 신청 시) 취업 후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확인·검토

※ 재직 시 취득한 정보·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업 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인터넷 검색, 취업예정 기관의 전임자나 유사분야 퇴직공무원에 대한 문의 등)

④ (취업승인 신청 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검토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을 승인할 만한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세밀하게 검토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취업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기관(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분장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승인 신청 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시 본인이 작성한 임의취업 사유서

4 > 우선취업제도

■ 우선취업 신청

- 우선취업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33조의4제1항)
 -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라야 함
 - ※ 취업개시 30일 전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취업승인신청의 경우 우선취업 신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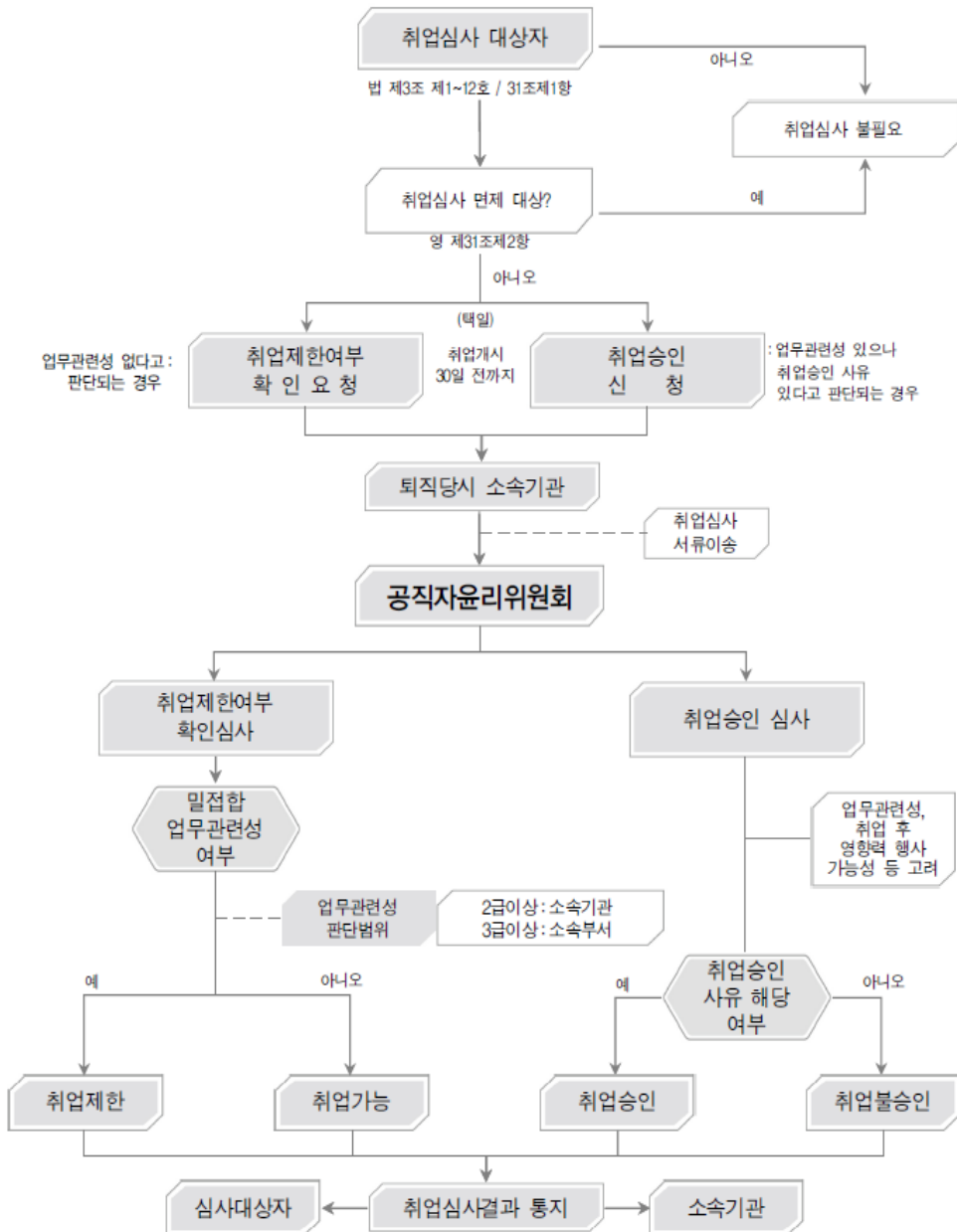
■ 우선취업 신청사유

- 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 ②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 ③ 기타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 우선취업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을 하게 할 수 있음(영 제33조의4제2항)
 - ※ 추후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에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해제 요청함

참고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Ⅲ 취업여부 확인(임의취업 일제조사)

■ 취업여부 확인 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회 이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법 제19조의2제1항)

※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경우 적발

■ 조사방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법 제19조의2제1항)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조회는 취업여부 확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인사혁신처(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 시스템을 연계시켜 일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각급 기관에 제공(연 2회)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도 인사혁신처가 일괄 조회하여 제공할 예정

■ 조사결과와 보고

- 국가기관의 장 등은 취업여부 확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후 심사 요청
- 취업심사 요청 시 추가제출서류
 - 취업심사대상기관(협회) 장의 취업확인서
 - 당해 퇴직공직자가 작성한 임의취업 사유서

■ 자료제출 요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함(법 제19조의2제3항)

■ 조사결과 조치

●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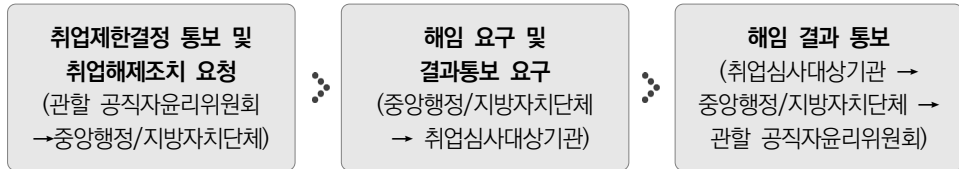
-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 통보(법 제30조제3항제8~11호)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검찰에 고발(법 제29조제1호)
 - 소속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고, 소속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법 제19조제1항)

●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 통보(법 제30조제3항제10호)

IV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1 취업해제 조치



※ 취업심사대상기관이 해임요구 거부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하여 법원에 통보

2 처벌

■ 내용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9조제1호)

■ 처벌절차

① 고발여부 결정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 결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영 제19조제2항제4호))
- 임의취업자 또는 우선취업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인의 고발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함
- 취업제한 결정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위법 취업한 경우에는 위법 취업사실이 확인된 날 이후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함

② 고발사건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소)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고발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됨
- (불기소) 불기소는 검사의 조사결과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므로 불기소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

V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1 >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및 목적

- 2014.12.30. 공직자윤리법 개정(2015.3.31. 시행) 도입
-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

2 >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및 취업현황 조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하고
 -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9조의4제1항, 영 제35조의6제1항)
- 그 취업이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해 6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함(법 제19조의4제1항)

3 > 공시하는 항목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영 제35조의6제2항)

4 > 퇴직공직자의 취업사실 신고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19조의4제2항)

※ 그 취업사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음(영 제35조의6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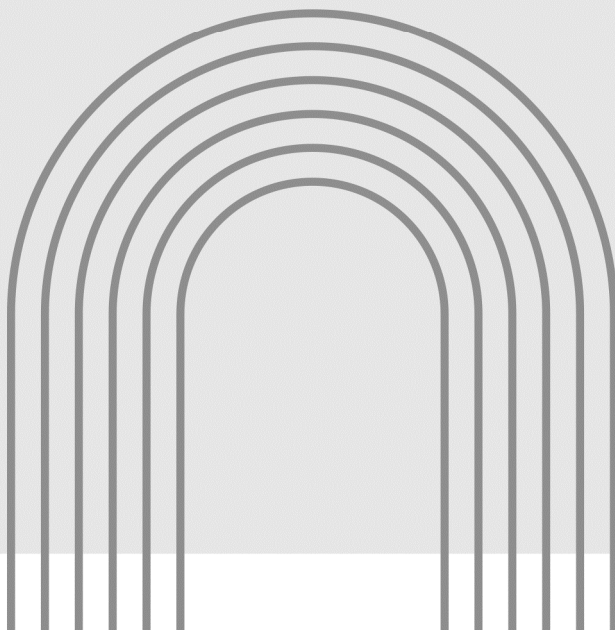
5 > 취업사실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11호)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30조제5항)



제2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I : 업무취급 제한

1 > 목적

-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전관예우 문제, 퇴직공직자 로비스트(lobbyist)화 등 공직자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

2 > 본인업무 취급금지

■ 취급금지내용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음(법 제18조의2제1항)

■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모든 공무원 및 법 제3조의2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적용대상업무

-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하였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직접 처리한 업무) 직제·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
 -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시에는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소속하였던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이나 업무취급승인 심사 시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 국한됨
 - (업무의 범위)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 (취급)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련되어 본인 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 자료요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 한 경우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요청 가능(제19조의2제2항)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곳에 재취업 한 경우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요청 가능(제19조의2제4항)

3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2) 업무취급 금지

■ 업무취급 금지 내용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업 금지 (법 제18조의2제2항)

■ 대 상 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적용기간 : 퇴직 후 2년간

■ 적용대상 업무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 ※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자신이 퇴직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함. 단,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
 - 퇴직 전 2년 간 근무한 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 기관 모두 해당하며 본부·본청 및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는 각 해당기관의 재직기간을 구분하여 판단

■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 내용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2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업무활동내역서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제1항)

● 제출대상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

●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영 제35조의3제1항)

●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무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 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법 제18조의3제3항 영 제35조의3제2항)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 포함(영 제35조의3제2항)

●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조치사항(영 제35조의3제3항)

-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2+2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법 제18조의3제2항)

-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영 제35조의3제4항)

● 업무내역서 비공개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함(영 제35조의3제5항)

4 업무취급승인제도

■ 내용

-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법 제18조의2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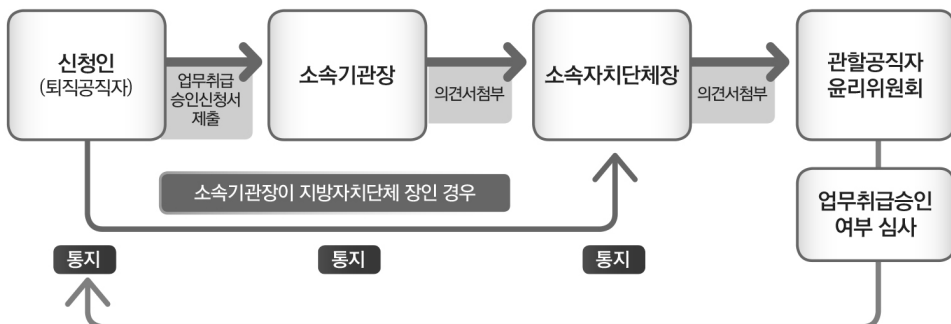
■ 대상자

-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

■ 승인사유(법 제18조의2제3항)

- ①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 ②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 ※ 두 가지 사유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승인 절차



■ 제출시기 및 제출서류

- 취업개시 전 또는 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
 - ※ 단, 취업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는 일정 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해야함
- 제출서류 : 업무취급승인 신청서, 취업예정 확인서

■ 조사·확인사항 및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서류

- 신청인이 법 제17조제3항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 업무취급승인 신청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공직자가 신청 가능
-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제출자료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취업예정확인서, 검토의견서, 인사기록카드, 업무취급승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업무취급승인 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 업무취급승인 심사(승인·불승인 의결)
- 업무취급 승인 여부를 신청인, 소속기관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 (영 제35조의2제3항)
 - 업무취급 불승인을 의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

5 > 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처벌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9조제2호) *15.3.30. 이전 퇴직자는 舊法 적용 (1년, 1천만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0조제1항)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0조제3항제9호)

II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1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법 제18조의4제1항)

■ 대상자

- 퇴직한 모든 공무원, 법 제3조의2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금지대상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위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법 제18조의4제1항)
-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영 제35조의4제4항)

2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신고(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

■ 신고대상자

- (재직자)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18조의4제2항)
- (제3자)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의4제3항)

■ 신고절차

- 청탁·알선 신고
 - (신고내용)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영 제35조의4제1항)

- (신고방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의한 별지 제20호의6서식(청탁·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청탁·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음)

● 신고의 처리

① 신고내용의 확인 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②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통보

-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종결처리)

■ 신고자 보호

-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신고자는 부정한 청탁·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및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소속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음

3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청탁 금지

-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법 제18조의5제1항)

■ 국가기관 등의 취업알선 금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위한 알선행위 금지(법 제18조의5제2항)

4 위반시 제재

제재 유형	처벌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속 기관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9조제3호)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제22조제17호)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본인의 취업을 청탁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제22조제18호)
소속기관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한 경우	시정권고(제23조)



PART

4

공직자윤리위원회

I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1 설치근거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법 제9조제1항)

2 설치현황 265개(2020. 6. 1 현재)

- 중앙(5개) :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 지방(260) : 각 지방자치단체(243), 시·도 교육청(17)에 설치

기 관 별	위원회(265개)	관 할
① 국 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무원
② 대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 공무원
③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
④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소속 공무원
⑤ 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중앙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원 지방 및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⑥ 지방자치단체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광역시자치단체 17개)	그 자치단체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 226개)	그 자치단체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⑦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17개)	그 시·도 교육위원 및 교육청소속 4급이하 공무원

Ⅱ 위원회 구성

1 구성(법 제9조제3항)

■ 인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 다만,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

■ 구성

- 위촉위원 : 위원장 포함 9명(시·군·구 5명)
 - 판사·변호사·검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 임명위원 : 부위원장 포함 4명(시·군·구 2명)

2 임기(법 제9조제3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등은 각 위원회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법 제9조제4항)

〈 위원회 규정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대통령령
 - ※ 위원 임기 및 선임방법 : 위촉위원은 2년(1차 연임가능), 임명위원은 재직 중인 기간이며, 대통령이 위촉 및 임명
- ▶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위원 임기 및 선임방법 : 위촉위원은 2년(1차 연임가능), 임명위원(행정국장 및 감사관)은 재직 중인 기간이며, 시장이 위촉 및 임명

Ⅲ 기능 및 권한

1 >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법 제9조제1항제1호)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법 제8조)

- 등록대상 재산의 과실누락자에 대한 보완명령
- 등록의무자에게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의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승인
- 등록의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 허위등록,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 등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의뢰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 재산공개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 위임

■ 심사결과와 처리(법 제8조의2)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항의 공표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이상의 조치내용을 등록기관장 및 기타 관계기관장에게 통보

2 > 재산공개 및 기타(법 제10조)

-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등록재산의 공개
-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허가
-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중앙 5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3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등(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 요청

4 > 취업제한 심사 등 결과의 공개(법 제19조의3, 영 제35조의5)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①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② 업무취급 승인 심사, ③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하여야 함

〈 공개항목 〉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퇴직시기
-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결과 또는 취업승인·업무취급승인·업무내역서 심사결과 및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 ▶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직위(직급), 취업일

5 > 취업이력 공시(법 19조의4, 영 제35조의6)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의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

6 >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법 제2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

7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 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IV 직권 재심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 취급의 승인 심사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 할 수 있음

〈 재심 사유 〉

- ▶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 ▶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V 회의·의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대법원·헌재·선관위 규칙,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우리시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거짓등록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용 재산취득 혐의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조사의뢰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 ▶ 등록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용 재산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처리
 - ▶ 공직자윤리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 공직자윤리법 위반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부록

1

묻고 답하기

PART 1 재산등록 및 심사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2. 등록대상 ①
---------------	---------	-----------

1.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실 등 소속 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자인가요?

▶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인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는 모두 재산등록대상자에 해당되며,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만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영 제3조제4항제10호).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 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된 직위를 말함

2. 군(郡)의 재무과에 세정계, 경리계 등이 있을 경우 세정계 소속 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자인가요?

▶ 세정계에서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재무과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는 모두 재산등록대상자에 해당됩니다(영 제3조제4항제12호).

3. 지방주사보시보로서 세무부서 실무수습 발령을 받은 자도 재산등록 대상자인가요?

▶ 시보기간 중의 공무원이라도 세무부서에 보직되어 정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등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위한 임시 부서 배치로 정규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보건소의 재산등록부서 소속으로 임기제공무원인 의사(공중보건과의사 포함)는 재산등록 대상자인가요?

▶ 재산등록대상인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5. 5급 일반직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재산등록 대상자인가요?

- ▶ 4급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퇴직하거나 신고기간 내에 퇴직할 경우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파견자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재산등록부서에 파견되어 장기간(6월 이상) 정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에 관계 없이 재산등록대상자에 해당되며(원 소속기관에 재산등록), 재산등록부서에서 재산등록 부서가 아닌 부서로 장기간(6개월) 파견되는 경우에는 재산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원 소속기관에서 의무면제자로 관리).
- ※ 파견기관에서 윤리업무담당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관으로 소속변경 후 윤리업무 담당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2. 등록대상	②
---------------	---------	---------	---

1. 조직개편 등으로 해당 등록기관장이 지정한 특정분야의 재산등록부서가 해제된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등록부서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의무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 소속기관 전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퇴직신고를 해야 함 (법 제6조제4항)

2. 며느리와 계모(새어머니)가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며느리와 계모(새어머니)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며 “친족사항”란에도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3. 재산등록의무자(혼인한 여성)의 시부모도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공직자윤리법 개정('09.2.3)으로 여성 등록의무자는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혼인하고 시부모의 재산등록을 해 온 여성 등록의무자는 경과규정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부모의 재산을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4. 시부모를 등록해 온 여성 등록의무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대상 친족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시부모와의 민법상 친족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재혼 또는 이혼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형제가 모두 등록의무자인 경우 부모 재산을 누가 등록하나요?

▶ 형제가 모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양하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 할 수 있습니다.

6.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가요?

▶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등록해야 합니다.

7.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의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자녀는 국적에 관계없이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등록대상입니다.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4. 재산등록의 종류
---------------	---------	-------------

1. 재산등록의무자가 승진 등으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어 재산등록기간(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중에 퇴직하였을 때 재산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재산공개자가 된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 하여야 하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대상자로 되어 재산등록기간 중 퇴직하였다면 공개자 최초등록의무는 면제되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자의 퇴직자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5. 재산신고 유예·면제 및 재산등록기간 연장
---------------	---------	---------------------------

1.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등록(신고)을 해야 하나요?

- ▶ 해외근무자와 휴직자도 최초재산등록은 하여야 하나, 재산변동신고는 3년 범위내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해외근무중 승진으로 의무자가 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최초 신고 유예 가능).

2.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기간(또는 연장기간) 종료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법 제24조에 의한 “재산등록거부”나 제22조 및 제30조에 의한 “...재산등록을 아니한 때”로 볼 수 있나요?

- ▶ 원칙적으로 해당되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하였다고 일괄적으로 “재산등록거부의 죄”나 법 제22조에 의한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사유의 객관적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부친 사망 후 상속권자인 자녀가 4명임에도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망부명의로 재산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등기상 망부 명의로 되어 있다 해도 법적 유산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권자가 4명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4공유로 신고).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6. 재산등록요령
---------------	---------	-----------

1. 재산등록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 기타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평가액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액면가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 공개대상자인 등록의무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6조의2).
- ▶ 그 외 재산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명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의 첨부이 가능합니다.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6. 재산등록요령 (부동산)
---------------	---------	-----------------

1.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 하천, 농로 등의 가액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공시지가가 없어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입력하고, 만약 실거래 가격을 알수 없다면 가액을 '0'으로 기재한 후 '비고(변동사유)'란에 "공시지가 없음"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시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심은 경우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등이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 하천, 농로 등의 가액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토지는 임차권으로 등록하고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경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보존된 수목의 집단일 경우에 한하여 등록합니다.

3. 공원묘지의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일반묘지는 토지 등록방법과 같이 등록하면 되나,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고 이용권의 일종이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을 묘지로 선택 후 비고에 "공원묘지"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4.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재건축 분양아파트는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6. 재산등록요령 (자동차 등)
---------------	---------	-------------------

1.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태양광 시설은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목장의 가축,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건설기계 제외), 태양광 시설 등은 법상 등록 대상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을 위해 본인이 등록을 원할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항목에 등록하면 됩니다.

2.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 및 운전교습용 자동차 등은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자동차 및 학원 건물은 등록대상 재산이나, 자동차학원 인가권은 등록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6. 재산등록요령 (현금)
---------------	---------	----------------

1. 사업유통자금을 일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현금, 예금 등 등록기준일 현재 보유형태에 따라 해당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그 보유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2. 보증금 없는 월세는 재산등록 대상인가요?

- ▶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은 재산등록 대상이나, 월세금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증감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현금·예금 등 재산항목의 '비고(변동사유)'란에 간단히 기재하거나 변동요약서 작성 시 '소득'란에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6. 재산등록요령 (증권)
---------------	---------	----------------

1.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최초 등록과 변동신고 시의 가액산정방법이 같나요?

▶ 기타 비상장주식은 최초등록과 재산변동신고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해당 기간 중 거래를 하여 실거래가격이 있으나 본인은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신고가액은?

▶ 배우자의 실거래가격(실거래가격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주식가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청산 중인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액면가 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나요?

▶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므로 액면가아닌 순자산가치로 신고합니다.

▶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기업이 재무제표 제공을 거부하는 등 평가액 계산을 위한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취득 노력 등 소명자료*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 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소명

4. 비상장기업이지만 기업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에 따라 해당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공시되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공시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정보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5.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등록의무자가 평가액 산정을 위한 기업정보 제공 요청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을 기업에 제출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기업이 재무제표 제공을 거부하는 등 평가액 계산을 위한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취득 노력 등 소명자료*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 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소명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6. 재산등록요령 (채권채무)
1.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의 외상미수금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외상미수금은 채권으로 간주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2. 가맹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신고대상인가요?		
▶ 가맹점비는 채권으로 간주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3. 파산자 및 개인회생자의 채무는 신고대상인가요?		
▶ 파산자는 채무자체가 탕감되므로 등록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자는 채무의 일부만 탕감되므로 변제할 채무를 등록하면 됩니다. ※ '비고(변동사유)'란에 '개인회생'과 변제할 채무액을 기재하십시오.		
4. 가족사이의 채권·채무도 등록대상인가요?		
▶ 가족 사이에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발생한 채권·채무도 사인간 채권·채무로 각각 등록하여야 합니다. ※ 부모 등의 자금으로 자녀 명의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		
5. 상환사채(주택채권, 주택상환채권)는 어느 재산항목에 신고해야 하나요?		
▶ 상환사채는 주식 항목에 신고하면 됩니다.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	9.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	---------------------

1.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의 조회를 해서는 안 되나요?

- ▶ 금융정보 사전 조회 제공제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예외적인 제도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의 명의인 통보의무가 면제되므로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금융자료의 조회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청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 ▶ 금융기관에서 확인서에 기재된 명단 중 특정인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항상 팩스나 우편을 통해 동의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래 금융정보 조회나 통보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서 원본이나 스캔자료를 제시 하여야 하나, 이럴 경우 너무 절차가 복잡해 금융정보 조회 자체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확인서와 명단으로 대체토록 한 것임. 만약, 금융기관에서 동의서를 요청 시 동의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확인서명단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아 요청하지 않은 자를 조회한 책임을 담당자가 져야 하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의 신청자와 가족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여 『조회자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동의자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하나요?

- ▶ 동의서 상 인적사항은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조회 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 내용이 틀릴 경우 금융정보 조회 자체가 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동의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하며, 동의서 내용의 일부 수정 또한 동의자의 확인(서명)이 필요합니다.
※ 류, 렬 등이 일부 은행에 유, 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 된 경우 금융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4.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 금융조회는 타인의 금융정보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제공절차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5. 기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퇴직 또는 의무면제 신고를 위해 정보제공을 받으려는 경우에 새로운 서식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6.6.30.) 전에 제출한 동의서는 정기변동신고 시에만 활용 가능한 동의서로, 2016. 6. 30. 이후 인사이동으로 퇴직 또는 의무면제 등 수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는 자동 철회되며, 새로운 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정기변동신고 뿐만 아니라 각종 수시신고 시에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1장 재산등록 및 공개

Ⅲ.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1. 재산등록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상속인이 등록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 ▶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허가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수사나 국정감사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의무자 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허용되나, 재산상속인은 등록서류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등록의무자의 재산사항에 대한 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 ▶ 열람·복사 허가는 등록의무자이었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사항이므로 범죄수사나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열람·복사 요청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등록기관장이 열람·복사하여 신청인(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가 유선상으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 ▶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은 반드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작성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선상으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본인 복사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 확인 후 사본 직접 전달이 원칙.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이 수령 가능(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 관련하여 긴급성 등의 이유로 구체적 비위사건과 관련한 증빙자료 없이 복사·열람 허가할 수 있는지?

- ▶ 재산등록에 관한 열람·복사허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4항에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로 한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번호, 범죄명, 피의자(피고인, 피내사자) 등이 포함된 수사사건 기록부, 공소장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복사·열람 허가 가능합니다.

5.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재산 심사 또는 소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는지?

-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의 등록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이외의 자료(심사결과, 소명사항 등)는 열람·복사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제2장 재산심사	I. 재산심사개요
<p>1. 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가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지?</p> <p>▶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경고 이상의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에 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더라도 전제조건인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없습니다.</p>	
<p>2. 공개대상자는 재산공개 후 3개월(필요시 3월 범위 내 연장)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간 경과 이후에도 심사를 계속할 수 있는가?</p> <p>▶ 공직자윤리법의 근본목적은 재산등록사항을 성실히 심사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으므로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은 법정 심사기간 내 심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사를 계속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3. 재산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경우 재심사를 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지?</p> <p>▶ 1) 결정의 기초가 증거자료의 위·변조 또는 고의 누락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절차 등에 위법이 발견된 경우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p> <p>위의 경우에 최초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의2).</p>	

제2장 재산심사	II.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2. 단계별 세부사항
----------	------------------	-------------

1. 부동산 및 금융조회 시 대상자 선정의 인원은 어떻게 정하나?

- ▶ 부동산조회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가능하나, 금융조회는 금융실명제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금융조회를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조회 가능).

2.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와 사전 금융조회 간의 차이점은?

- ▶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조회 시 금융기관은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명의인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전금융조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명의인의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정기변동재산 신고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명의인 통보를 하지 않으며 통보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727호, 2020.5.29.)」상 비조회성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처분에 해당하는데 비조회성 재산은 무엇인가요?

-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상 비조회성 재산은 사인간채권·채무, 현금, CD(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재산항목입니다. 다만, 건물임대채무, 전세(임차)권, 분양권 등의 재산항목은 재산신고 시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조회성 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잘못 신고한 금액, 비조회성 재산, 친족누락, 경미한 사항 등 각 처분기준에 해당하여 그 중 가장 중한 비조회성 재산 심사기준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 보완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

- ▶ 보완신고서는 등록의무자가 잘못 신고한 사항을 정정하는 의미이므로, 등록의무자가 비조회성 재산 심사기준에 의해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 신고한 모든 사항(과다·누락·과소 재산, 친족, 경미한 사항 포함)을 정정하여 보완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재산심사 결과, '보완명령'이상의 처분에 해당되나 보완신고서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심사 중인 신고서의 등록기준일 이후의 퇴직 또는 의무면제 신고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보완신고서가 생성되지 않지만, 보완신고서가 없더라도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재산심사	II. 재산심사 절차 및 방법	2. 단계별 세부사항
<p>6.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하‘질서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p> <p>▶ 질서법상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는 과태료 부과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유권해석 '11.3.).</p>		

PART 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선물신고

제1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I. 개요	3. 대상주식
--------------------	-------	---------

1. 의무예탁기간은 지났지만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하고 있는 우리사주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면 인출여부와 관계없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장기보유 여부는 심사위원회 심사 시 고려사항이 됨

2. 자문형 랩을 A, B, C 계좌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 (ㄱ)주식이 A계좌에 1천만 원, B계좌에 1천만 원, C계좌에 2천만 원 있는 경우, 각 랩 계좌별로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해당 종목의 총합은 4천만 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인 것인지?

- ▶ 각 랩 계좌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특정 종목 (ㄱ) 주식의 총 가액이 4천만 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 ▶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 (ㄱ) 주식을 일반 주식으로 2천만 원, 자문형 랩으로 2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정 종목 (ㄱ) 주식의 총가액은 4천만 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제1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II. 주식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	------------------------

1. 보유주식을 분리하여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백지신탁 할 수 있는지?

- ▶ 일부 매각과 일부 백지신탁을 혼합할 수 있음. 또한 일부 매각과 일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가능함

2. 재산공개대상자가 되었으나 현안업무를 시급히 수행하다 보니 보유주식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한 경우?

- ▶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지연사유서(별지 제1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
-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재(법 제8조의2 준용)를 받을 수 있음

제1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III.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와도 백지신탁계약을 할 수 있는지?	
▶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펀드)의 성격상 특정 주식에 대한 정보의 접근 또는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수탁기관이 될 수 있으나,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투자운용에 대하여 고객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으로서 부적격함	
2. 백지신탁을 하려는 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 백지신탁의 장점은 공직자로서 공·사적 이해충돌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임 ▶ 다만, 계약해지가 법 제14조의10 제2항에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계약 후에는 모든 주식의 신규취득이 불가능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액산정 및 처분이 어려워 처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3. 백지신탁 후 주식의 신규 취득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각 후에도 주식의 신규 취득이 금지되는지?	
▶ 현행 법령에 매각 후 주식의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음	
4. 백지신탁 상태에서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지?	
▶ 백지신탁 중 신규주식 취득은 상속·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이므로, 3천만 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5. 백지신탁 후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허가 요청은 언제 가능한지?	
▶ 법률상 신탁재산의 전부 매각허가 요청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최초 신탁된 주식의 처분기간이 60일이므로 매각허가 요청은 그 처분 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임	
6.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일단 백지신탁했다가 이후 상임위를 변경한 경우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	
▶ 상임위를 변경 후,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과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1장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Ⅳ.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p>1. 담당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에 변화가 없고, 기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이 약 5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정기변동 신고 과정에서 2천5백만 원 가액의 주식이 신규로 확인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p> <p>▶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시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님</p>	
<p>2.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을 2천만 원 추가 매입하고 새로운 주식을 2천만 원 신규 매입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p> <p>▶ 직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관련성 없음 주식은 얼마든지 추가매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식은 2천만 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님</p>	
<p>3. 직무관련성 있다고 결정된 주식의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일부만 매각하여 3천만 원 이하로 만들면 계속 보유 가능한지?</p> <p>▶ 1개월 이내에 그 일부를 매각(또는 백지신탁)한 뒤 3천만 원 이하로 만든 상태에서는 계속 보유 가능함(18.4.26. 제102차 심사위원회 결정)</p>	

PART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1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 개요	2. 취업의 범위 및 취업심사대상자
----------------	-------	---------------------

1. 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서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제도 적용은?

-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의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인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2.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 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대상 여부?

- ▶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하여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비위면직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과 중복 적용

3. 취업심사대상이 아닌 5급에서 4급으로 명예퇴직한 자의 취업심사대상 여부?

- ▶ 임용통지서 상의 퇴직일에는 4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원 신분은 퇴직일 전날 24:00까지만 유지되고 그때는 5급이므로 취업심사대상이 아님
- ※ 공무원 면직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일이 기재된 일자의 영시(00:00)부터 공무원신분을 상실한다”고 판결(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31 판결)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1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서 명예퇴직자의 경우는 명예퇴직 전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로 계산

4.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으나 재산등록기간인 2개월 이내 퇴직하여 재산등록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자의 취업심사대상 여부?

- ▶ 법 제17조제1항에서 취업심사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함

5.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일 전에 퇴직한 사람도 확대된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취업심사면제규정이 적용되나요?

- ▶ 2019.12.3.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6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에서 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6.4.)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법 시행일(2020.6.4.)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부터 확대된 취업심사대상기관(합작법무법인, 초·중등 사립학교 및 그 설립학교법인,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사기업체와 법인단체 등), 6·7급 실무직이 특정직위에 취업했을 시 심사면제 등 변경된 취업제한제도가 적용됨
- ▶ 그렇다면, 2020.6.3. 이전에 퇴직한 공직자는 확대된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취업심사면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본인이 퇴직할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음

제1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 개요	3. 취업심사대상기관
----------------	-------	-------------

1. 취업심사대상협회의 범위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 ▶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2월 중 고시하는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와 해당 협회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가 그에 해당되며, 취업예정자와 협회와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취업예정자와 협회 자체와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관련성 여부 및 취업예정자와 협회 회원사인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여부를 함께 판단

※ “협회”는 “협회·조합·연맹·연합회”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기관의 성격상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구성원(회원·조합원 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

2. 취업심사대상에 속하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협회 성격의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 ▶ 취업심사대상 협회의 업무관련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취업예정자와 협회 자체 및 협회 회원사인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등과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함께 판단

3. 사립대학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되었는데 순수학문 연구를 위해 평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 사립대학의 교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직위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됨 즉, 민관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등의 직위(소위 보직교수)에 있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되나 순수 학문적 전문성을 살려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4. 2020년도 적용 취업심사대상으로 고시된 20,802개의 기관에 대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은 취업이 금지된다는 것인가요?

-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범위의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등 관련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20,802개 기관에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 ▶ 취업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3급 이하 공무원 등 적용) 또는 기관(2급 이상 공무원 등 적용)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됨을 의미함
- ※ 바꾸어 설명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함

5.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가 연도 중 회사명칭 변경, 사업분야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거나 합병된 경우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를 충족하고 있다면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함

6. 취업할 당시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관보에 고시되어 있지 않아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였으나 1년이 지난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관보에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 ▶ 취업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 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업체가 향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관보에 고시되더라도 별도로 취업심사는 받지 않아도 됨(법제처 법령해석 08-0358, '08.12.11). 다만,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2개의 업체가 하나로 합병되어 신설법인 성격의 회사로 된 경우에는 자본금·외형거래액이 법령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되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제1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 개요	4.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	--------------	------------------------------

1.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부서업무 기준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 3급 이하 퇴직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부서 업무기준 업무관련성 판단의 경우에는 과의 장 및 과의 소속 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로, 그 상위 직위에 있는 경우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
- ▶ 고위공직자(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어 본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전체의 업무,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

2. 광역의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은?

- ▶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므로, 퇴직 전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전체의 업무(각 상임위 포함)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제1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II.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1.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을 요청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2.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지?

- ▶ 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에서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면서 공직에서 퇴직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 ▶ 만약에 현직자에게 심사신청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직 중 업무처리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현직 공직자에게는 취업심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3.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의 작성방법에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등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로 볼 때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 거 아닌지?

- ▶ 신청서 서식의 작성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의해 전역 예정일이 6개월 이내 있는 군인만 해당됨
- * 제대군인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제1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V.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1. 취업이력이 공시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 직무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 한 경우에는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을 공시함
- ▶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등과 특정분야 공무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원이 취업이력공시 대상에 해당됨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간 3년이 지난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다가 이직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 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이직한 시점이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1. 업무취급 제한	2. 본인업무 취급금지
1. 모든 공직자가 재직한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전부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 재직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취급금지의 대상이며,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처리한 업무가 아닌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만 해당됨		
2.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취급제한은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라면 취업심사대상기관인지 여부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을 받게 됨		
3. 어떤 경우 법 제1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아서 업무취급이 금지되는 것인지?		
▶ 예컨대, 재직 중 A업체에 B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퇴직 후 A업체에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임. 다만, 재직 중 직접 처리내역과 취업 후 취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됨		

제2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1. 업무취급 제한	3. 기간업무기준 업무취급 금지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2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 이외의 업체에 취업하는 때에도 2+2 업무취급제한 대상인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을 받고, 이 경우에 한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그 기관의 소속기관장(예, ○○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공직자인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 이외에 소속 중앙행정기관(본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한 업무의 취급도 금지되는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지방국세청에만 근무한 경우 소속 기관과 그 하급 기관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취급이 2년 간 금지됨		
3.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2년 경과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인지?		
▶ 업무내역서는 퇴직 후 2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데, 2년 경과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이 아님		
4.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 작성 시 퇴직 후 2년 동안 2개 이상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근무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퇴직 후 2년간 소속기관의 일정 업무 취급제한이 목적이므로 기관업무기준 취업 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매 1년이 지난 1개월 이내 취업한 모든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업무내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제2장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II.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1.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는지?	
▶ 법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신고로 인한 징계조치 등 어떤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이 금지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됨	

매뉴얼 및 묻고답하기 참고자료 : 공직윤리업무편람(인사혁신처 2020년)



부록

2

관련법령

1.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1.6.23.]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2.3>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	

<p>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p>	
<p>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개정 2009.2.3></p>	
<p>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부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 · 부총장 · 대학원장 ·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 · 부기관장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p>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p> <p>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9.></p> <p>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 ·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p> <p>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5. 13., 2011. 10. 28., 2013. 11. 20., 2014. 1. 7., 2014. 11. 28., 2016. 6. 28., 2016. 11. 29., 2017. 1. 10., 2017. 1. 31., 2018. 7. 24., 2020. 3. 10., 2020. 6. 2., 2020. 7. 14., 2020. 9. 10.,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 · 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 · 나목과 제2호가목 · 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 지도관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 · 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 · 실장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 6. 11.)

[제목개정 2009. 2. 3.]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8. 국제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9의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
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
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
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
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
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
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제9호의3,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
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
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
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p>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p> <p>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p> <p>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p> <p>1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p> <p>⑤ 제4항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4. 1. 7., 2020. 6. 2.></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36조의3(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p>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p>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p>기관·단체</p> <p>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p> <p>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9. 2. 3.]</p>	<p>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p> <p>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p> <p>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3. 3. 23., 2014. 11. 19.></p> <p>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1. 23.></p> <p>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23.></p> <p>[본조신설 2009. 2. 3.]</p>
<p>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p>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p>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삭제 <1994. 12. 31.></p> <p>②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 2. 3.></p> <p>③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 2. 3.></p> <p>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 2. 3.></p> <p>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p> <p>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p> <p>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p> <p>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p> <p>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p> <p>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p> <p>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p> <p>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p> <p>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p> <p>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p> <p>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p> <p>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p> <p>5. 주식매수선택권</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8., 2016. 1. 19., 2019. 12. 3.></p> <p>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p> <p>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p> <p>3.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p> <p>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p>	<p>거래가격"이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 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09. 2. 3., 2020. 6. 2.></p> <p>⑥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0.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p>[제목개정 2009. 2. 3.]</p> <p>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p> <p>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이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p> <p>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0.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
--	---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 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 시가 등 명세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하 같다)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격(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가.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력으로 정하는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5

나. 1주당 순자산가치 × 4/5

다. 1주당 액면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가. 재산 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④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2.>

⑤ 법 제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⑦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6. 2.>

1.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업개시일 등 해당 법인의 일반 정보

2. 부채총액, 최근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등 해당 법인의 재무 정보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전문개정 2018. 7. 2.]

[제목개정 2020. 6. 2.]

제5조의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2016. 6. 28., 2020. 6. 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p>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p> <p>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p> <p>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p> <p>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p> <p>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p>	<p>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p> <p>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p>

(轉補)·강임(降任)·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처·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11. 삭제 <2015. 12. 29.>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

말한다. <개정 2017. 12. 19.>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5. 13., 2011. 10. 28., 2013. 11. 20., 2014. 1. 7., 2014. 11. 28., 2016. 6. 28., 2016. 11. 29., 2017. 1. 10., 2017. 1. 31., 2018. 7. 24., 2020. 3. 10., 2020. 6. 2., 2020. 7. 14., 2020. 9. 10., 2020. 12. 3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9의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

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⑤ 제4항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4. 1. 7., 2020. 6. 2.〉

[전문개정 2009. 2. 3.]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재산등

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0. 6. 2.〉

1.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 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격(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가.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5

나. 1주당 순자산가치 × 4/5

다. 1주당 액면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가. 재산 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④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2.>

⑤ 법 제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6. 2.>

1.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업개시일 등 해당 법인의 일반 정보

2. 부채총액, 최근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등 해당 법인의 재무 정보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전문개정 2018. 7. 2.]

[제목개정 2020. 6. 2.]

제4조의3(등록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7. 7. 26., 2020. 7. 14., 2020. 8. 4.>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처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6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은 그 소속기관

2의2. 삭제 <2017. 7. 26.>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도경찰청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전문개정 2009. 2. 3.]

제4조의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1. 23.]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전문개정 2009. 2. 3.]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2016. 6. 28., 2020. 6. 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 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 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통보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 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 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 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 (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 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 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 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8.>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전문개정 2009. 2. 3.]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2020. 9. 10.>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4.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5.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9.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10.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1.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9. 제1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22.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2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사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3.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제1항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1.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에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p>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0. 28.></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36조의3(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p>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p> <p>③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되어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p>	

<p>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p> <p>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p> <p>⑤ 삭제 <2015. 12. 29.></p> <p>⑥ 삭제 <2015. 12. 29.></p> <p>⑦ 삭제 <2015. 12. 29.></p> <p>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⑨ 삭제 <2015. 12. 29.></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5조의2(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p>②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로 한다.</p> <p>③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는 주식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p>	<p>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7. 2.></p>

<p>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p> <p>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p> <p>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p> <p>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p> <p>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 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 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p> <p>[전문개정 2009. 2. 3.]</p>	<p>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2.></p> <p>③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p> <p>④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4조제3항제12호 중 골프회원권의 매매·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만,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를 알 수 없거나 해당 연도에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변동액을 신고하되, 공시가격 변동액이 이미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p> <p>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수량·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p>	<p>제5조의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를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전문개정 2009. 2. 3.></p>

<p>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p> <p>3.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의 변동사항</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p> <p>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p> <p>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p>	<p>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7. 1. 31., 2020. 6. 2.></p> <p>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p> <p>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p> <p>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p> <p>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연합회, 협회 등(이하</p>

보유·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증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증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등기,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화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2. 3.]

[제5조에서 이동 <2016. 6. 28.>]

제36조의2(공직자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4. 1. 7., 2016. 6. 28.>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 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p> <p>④ 소속기관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8.></p> <p>1.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p> <p>2.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p> <p>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① 등록기관(법 제5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p> <p>② 병가·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p>

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2016. 6. 28., 2020. 6. 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신청서를

	<p>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p> <p>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 4. 1.></p> <p>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p>	<p>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10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에 관하여는 제5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7., 2016. 6. 28.></p> <p>[전문개정 2009. 2. 3.]</p>

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

제11조(등록의무자·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전문개정 2009. 2. 3.]

제12조(진술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심사 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 개요
3. 심사 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36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 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⑯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3.]

②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수입 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 시기, 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1.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0. 28.>
- [전문개정 2009. 2. 3.]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4. 1. 7., 2016. 6. 28.>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 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

자등,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④ 소속기관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8.>

1.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전문개정 2009. 2. 3.]

제36조의3(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p>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8조의2(심사결과와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증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p>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 1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p>③ 제1항의 증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p> <p>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p> <p>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p> <p>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p>	<p>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2.></p> <p>[전문개정 2009. 2. 3.]</p>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제15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법 제9조제2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2. 3.]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6. 6. 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 10. 28.]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

<p>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p> <p>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p>	
<p>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p>[본조신설 2015. 12. 29.]</p>	
<p>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1. 7. 29., 2012. 12. 11., 2015. 12. 29., 2017. 3. 21., 2020. 12. 15., 2020.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 	<p>제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① 등록기관(법 제5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p> <p>② 병가·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① 삭제 <2011. 10. 28.>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0., 2020. 7. 14.>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④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3.>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3.]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p>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개정 2015. 12. 29.></p> <p>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9.></p> <p>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09. 2. 3.]</p>	<p>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p> <p>제26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복사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 허가는 등록기관의 장(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p>[전문개정 2009. 2. 3.]</p>
<p>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p>	

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기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p>	
<p>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 <p>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p>	<p>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2016. 6. 28., 2020.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p>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p> <p>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p>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 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 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전문개정 2009. 2. 3.]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제8조 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개정 2009.2.3>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	제27조의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단·부·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 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2.>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을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7조의5(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법 제14조의4제1항 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류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p> <p>② 삭제 <2019. 12. 3.></p> <p>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p> <p>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8.></p> <p>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8.></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목개정 2016. 6. 28.]</p> <p>[제27조의6에서 이동 <2016. 6. 28.>]</p>
<p>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p> <p>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 	<p>제27조의7(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등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② 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제5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6. 28.></p> <p>[전문개정 2009. 2. 3.]</p>

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2.>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류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p>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p> <p>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p>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2.></p> <p>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p> <p>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목개정 2020. 12. 22.]</p>	
<p>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p>	<p>제27조의9(주식취득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p>

<p>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p> <p>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p> <p>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09. 2. 3.]</p>
<p>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p>	

<p>통지할 수 있다.</p> <p>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p> <p>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p>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7조의10(신탁재산의 통보 등) ① 법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8.></p> <p>② 법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 분기 말일(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수탁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신탁재산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에는 매 분기 말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매 년도 마지막 분기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신탁상황의 보고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목개정 2016. 6. 28.]</p>
<p>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p> <p>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p>	

<p>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 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5.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p>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에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p>제27조의11(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법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16. 6. 28.]</p>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② 공개대상자들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들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p>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12. 29.]</p>	
<p>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p>[본조신설 2015. 12. 29.]</p>	
<p>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p> <p>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제</p>	

<p>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p> <p>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의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p> <p>[본조신설 2015. 12. 29.]</p> <p>[제목개정 2020. 12. 22.]</p>	
<p>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p>	<p>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8.></p> <p>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8.></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목개정 2016. 6. 28.]</p> <p>[제27조의6에서 이동 <2016. 6. 28.>]</p>
<p>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12. 3.]</p>	<p>제27조의13(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 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로 한다.</p> <p>②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p>[본조신설 2020. 6. 2.]</p>
<p>제3장 선물신고 <개정 2009.2.3></p>	
<p>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p>	<p>제28조(선물의 가액)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개정 2016. 6. 28.></p> <p>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이하 “선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8.></p> <p>③ 선물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 6. 28.></p>

<p>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8.></p> <p>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p> <p>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p> <p>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6. 2.></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 12. 3.></p> <p>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목개정 2019. 12. 3.]</p>	
<p>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개정 2011.7.29></p>	
<p>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p>	<p>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p>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19. 12. 3.>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2020. 9. 10.>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나목과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4.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5.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9.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10.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1.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 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소속기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30.>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9. 제1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식을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29.]

[제목개정 2014. 12. 30.]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22.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2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사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3.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제1항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30., 2020. 6. 2.>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5. 3. 30., 2020. 6. 2.>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3. 30., 2017. 9. 5., 2020. 6. 2.>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1조제1항제20호·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전문개정 2009. 2. 3.]

[제목개정 2015. 3. 30., 2020. 6. 2.]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2014. 6. 25., 2015. 3. 30., 2020. 6. 2.>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로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6. 2.>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 3. 30.>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 업무

2. 인·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5. 3. 30.>

⑤ 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6.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군수품

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57
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⑥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
다)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
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
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3. 30., 2018.
7. 2., 2019. 6. 25., 2020. 6. 2.>

1.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단체

2.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단체

3.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단체

4.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법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
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6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
의 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
여 매년 10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
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1. 국세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 및 법 제17조제1항제1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전문개정 2009. 2. 3.]

[제목개정 2015. 3. 30., 2020. 6. 2.]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1. 10. 28., 2015. 3. 30., 2020. 6. 2.>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8. 7. 2.>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1. 10. 28., 2015. 3. 30., 2020. 6. 2.>

[전문개정 2009. 2. 3.]

제34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

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2020. 6. 2.>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p>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28., 2017. 1.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p>[전문개정 2009. 2. 3.]</p>
<p>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 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p> <p>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9.]</p>	<p>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3. 30., 2020. 6. 2.></p> <p>[전문개정 2011. 10. 28.]</p> <p>제34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4. 11. 19.></p> <p>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p>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3., 2011. 10. 28., 2015. 3. 30., 2020. 6. 2.>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p>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p> <p>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28., 2017. 1.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p>[전문개정 2009. 2. 3.]</p>
<p>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p> <p>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p>	<p>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p>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9.]

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30., 2020. 6. 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5. 3. 30., 2020. 6. 2.>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p>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p> <p>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 7. 29.]</p>	<p>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30., 2020. 6. 2.></p>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5. 3. 30., 2020. 6. 2.></p> <p>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p>

	<p>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5조의4(청탁·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p>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p> <p>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2.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했는지 <p>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p>

<p>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9. 12. 3.]</p>	<p>·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무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p>⑥ 법 제18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같은 항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p> <p>[본조신설 2011. 10. 28.]</p> <p>[제목개정 2020. 6. 2.]</p>
<p>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p> <p>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p> <p>[본조신설 2011. 7. 29.]</p>	
<p>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2. 30., 2019. 12. 3., 2020. 12. 22.></p>	

<p>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p> <p>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2. 30., 2019. 12. 3.></p> <p>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29.></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30., 2015. 12. 29., 2019. 12. 3.></p>	<p>제35조의5(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본조신설 2020. 6. 2.]</p> <p>[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20.</p>

<p>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p> <p>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9., 2019. 12. 3.></p> <p>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p> <p>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괄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p> <p>[본조신설 2011. 7. 29.]</p> <p>[제목개정 2015. 12. 29.]</p>	<p>6. 2.}]</p>
<p>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관리 및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p>	<p>제35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p>

<p>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p> <p>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p> <p>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p> <p>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p> <p>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p> <p>[본조신설 2014. 12. 30.]</p> <p>[제목개정 2019. 12. 3.]</p>	<p>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p> <p>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또는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p> <p>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p> <p>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p> <p>[본조신설 2015. 3. 30.]</p> <p>[제3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7로 이동 <2020. 6. 2.>]</p>
<p>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p> <p>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p> <p>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p> <p>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2.></p> <p>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p> <p>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p> <p>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p>

<p>[본조신설 2014. 12. 30.]</p>	<p>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 3. 30.]</p> <p>[제35조의6에서 이동 <2020. 6. 2.>]</p>
<p>제5장 보칙 <개정 2009.2.3></p>	
<p>제20조(기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2. 30., 2020. 12. 22.></p> <p>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p>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0. 28.></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p>	

<p>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5. 12. 29.]</p>	
<p>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6장 징계 및 벌칙 <개정 2009.2.3></p>	
<p>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2019. 12. 3., 2020.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 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6.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7.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18.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p>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p> <p>21.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한 경우</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을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p> <p>[본조신설 2011. 7. 29.]</p>	
<p>제24조(재산등록 거부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p>	

<p>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09. 2. 3.]</p>	
<p>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2. 3.]</p>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7. 29.]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9., 2019. 12. 3., 2020. 12. 22.〉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

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9., 2019. 12. 3.>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3.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6. 삭제 <2020. 12. 22.>

7.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p>9.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p> <p>10.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p> <p>11.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p> <p>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p> <p>[전문개정 2011. 7. 29.]</p>	
--	--

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1] [총리령 제1620호, 2020. 6.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1. 영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1주당 당기순이익을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⑤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4.]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4.〉

[전문개정 2009. 2. 4.]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단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 10. 28.,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4.]

제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③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2020. 6. 4.〉

[전문개정 2009. 2. 4.]

제3조의4(주식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6. 22.]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 8. 23.>

[전문개정 2009. 2. 4.]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4.]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7조(심사확인 날인)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②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전문개정 2009. 2. 4.]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전문개정 2009. 2. 4.]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 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9조의3 삭제 <2009. 2. 4.>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1조(열람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2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지연되는 경우 공개대상자들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지연사유서를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 서식(백지신탁 관리·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④ 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6. 30.>

⑤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6. 6. 30.>

⑥ 법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⑦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6. 6. 30.>

⑧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6. 30.>

⑨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6. 30.>

[전문개정 2009. 2. 4.]

제13조(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30.>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에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4. 2., 2018. 7. 25., 2020. 6. 4.>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1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영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3.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4.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5.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전문개정 2011. 10. 28.]

[제목개정 2020. 6. 4.]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7. 25., 2020. 6. 4.>

[전문개정 2011. 10. 28.]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2018. 7. 25., 2020. 6. 4.>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2. 4.]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전문개정 2018. 7. 25.]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7. 25., 2020. 6. 4.>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2. 4.]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르며,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7. 25., 2020. 6. 4.>

②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17조의4(청탁·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본조신설 2011. 10. 28.]

[제목개정 2020. 6. 4.]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2. 8. 23., 2015. 4. 2., 2020. 6. 4.>

[전문개정 2009. 2. 4.]

제18조의2(취업사실 신고)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4. 2.]

제19조(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4.>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4.]

부 칙 <제1620호, 2020.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3.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07-29, 2014-12-15〉〈개정 2020.06.25.〉〈개정 2021.6.4.〉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행정국장 및 감사관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4.〉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6602호, 2021.6.23.〉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출 처

 공직윤리업무편람(인사혁신처 2020년)

청렴이음

청렴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발 행 인천광역시
기 획 인천광역시(감사관)
발행일 2021. 7. (초판)
디자인 032디자인(주)

www.incheon.go.kr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발간등록번호 : 54-6280000-000509-10

